

KWDI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주경미 · 박금식 · 강성훈 · 조명희

2011

연구보고서 - 14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1 연구보고서 14-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의 지역 연구보고서

---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

연구기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책임자 : 주 경 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금 식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강 성 훈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조 명 희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요약

이 연구는 그 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혹은 현실적 관심이 저조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해 현재 의회 및 의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향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은 부산을, 대상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의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 3개의 구의회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은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이라는 성 주류화의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력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조사를 주로 활용했다. 분석한 문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이고, 심층면접은 부산지방의회의 전현직 의원, 정당 관계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성 주류화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평등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연구결과로 도출한 정책제언은 모두 10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1. 지방의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에서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2.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3.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여성 진출이 확대
4. 광역의회에 성평등위원회, 기초의회에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5.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에 성 주류화 자문위원회 구성
6. 지방의회 의원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결성 및 지원
7.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성 주류화 워크숍 개최 정례화
8. 기초의회 전문위원직 개방형직위로 전환
9.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 도입
10.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은 성 주류화 정책으로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5
3. 연구방법 .....	5
4. 기대효과 .....	6
II.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 .....	7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	12
가. 기본현황 .....	12
나. 자치법규 제·개정 .....	19
다. 예산의 심의·의결 .....	27
라. 행정사무감사 .....	29
마. 기타 의정활동 .....	36
2. 기초의회 의정활동 분석 :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의회 .....	43
가. 기본현황 .....	43
나. 자치법규 제·개정 .....	46
다. 예산의 심의·의결 .....	53
라. 행정사무감사 .....	55
마. 기타 의정활동 .....	60
3.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시사점 .....	64
가. 의정활동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	64
나. 지방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시사점 .....	68

<b>Ⅲ.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와 의원의 역할</b>	73
1. 면접조사 개요	75
가. 조사방법과 표본추출	75
나.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75
다. 면접의 주요내용	77
2. 면접조사 결과분석	78
가. 여성의 주류화	78
나. 성인지 관점의 주류화	83
<b>Ⅳ. 성 주류화를 위한 지방 의회의 역할강화 방안</b>	93
1. 의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에서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95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95
3.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여성 진출 확대	96
4. 지방의회에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96
5.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자문위원회 구성	96
6. 지방의원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결성 지원	97
7.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워크숍 개최 정례화	97
8. 기초의회 전문위원직 개방형직위로 전환	97
9.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 도입	98
10.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은 성 주류화 정책으로	98
<b>■ 참고문헌</b>	101
<b>■ 부    록</b>	103
<부록 1> 1차 전문가 회의결과	105
<부록 2> 2차 전문가 회의결과	110
<부록 3> 3차 전문가 회의결과	115
<b>■ Abstract</b>	119

## 표 목 차

<표 II-1> 의정활동 관련 자료 분석틀 .....	10
<표 II-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수 .....	12
<표 II-3>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 .....	16
<표 II-4>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 .....	18
<표 II-5>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 처리 현황 .....	20
<표 II-6>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조례 .....	21
<표 II-7>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의원 발의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 .....	22
<표 II-8>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 처리 현황 .....	25
<표 II-9>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조례 .....	25
<표 II-1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 .....	26
<표 II-11> 2007~201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의 시의회 심의조정 내역 .....	28
<표 II-12> 2006~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결과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수 .....	31
<표 II-13>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2
<표 II-14>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2
<표 II-15>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3
<표 II-16>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4
<표 II-17>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5

<표 II-18>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의원 수 .....	36
<표 II-19>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37
<표 II-2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내용 .....	38
<표 II-21>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여 의원 수 .....	40
<표 II-22>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40
<표 II-23>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42
<표 II-24> 구의회별 의원 수 .....	43
<표 II-25> 구의회별 의회 구성 .....	44
<표 II-26> 구의회별 위원회 중 여성정책 소관 사항 .....	45
<표 II-27> 구의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	47
<표 II-28> 구의회별 여성정책 관련 조례안 처리 현황 .....	48
<표 II-29> 구의회별 여성의원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현황 .....	49
<표 II-30> 구의회별 2007년도~2011년도 예산 중 여성정책 관련 심의조정 내역 .....	54
<표 II-31> 구의회별 2006년도 시장·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56
<표 II-32> 구의회별 2007년도 시장·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57
<표 II-33> 구의회별 2008년도 시장·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58
<표 II-34> 구의회별 2009년도 시장·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59
<표 II-35> 구의회별 2010년도 시장·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60
<표 II-36> 구의회별 구정질문 참여 의원 수 .....	61
<표 II-37> 구의회별 의회 구정질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62
<표 II-38> 구의회별 의회 5분자유발언 참여 의원 수 .....	62
<표 II-39> 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	63
<표 III-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76

## 그림 목 차

[그림 II-1]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구성 .....	14
[그림 II-2]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구성 .....	17



# I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5
3. 연구방법	5
4. 기대효과	6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지방의회가 성 주류화와 관련해 수행한 역할을 부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역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각종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행정조직 중심으로 성 주류화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료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실행방안은 구체화되어 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실행 매뉴얼이 보급될 정도의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혹은 현실적 관심은 저조했다. 막연히, 그리고 당연하게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등의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성 주류화에 중요한 축이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은 부족했다.

지금까지 지역의 여성 리더들은 여성을 정치인으로 진입시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이는 성 주류화의 첫 단계인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즉 지방의회 내의 여성의 양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통해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젠더 관점이 통합되는 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에 대해서 관심이 저조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성 인지적으로 재편하는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주류화를 기본적인 분석틀로 삼아 부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앞으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의회 여성 의원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더 많고, 여성을 대변하려고 하며, 여성정책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Sapiro 1981; Randall 1982; 조기숙 1998)는 것에 주목했다. 남성의원이 광역

#### 4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자치단체장과 정당에 공조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 의원은 자신의 임기 중에 중요한 여성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한다면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서 성의 주류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부산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활력상실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대단히 복잡하고 중첩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감소되고,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수익성이 불투명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2 도시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관련된 의제를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방의회에서는 기존의 정책결정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부산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대도시 중에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은 널리 퍼져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문제라고 여겼던 출산, 양육, 돌봄 등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부산지역에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젠더 관점이 통합되는 성의 주류화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조성된 젠더관점의 통합이라는 성 주류화 환경이 행위주체인 의원에 의해 어떻게 촉진, 억제, 정체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성 인지적으로 재편하는 주류의 전환 (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과 지역간에는 힘의 불균형과 구조적 종속의 문제, 지역 내에서는 약의회 강행정이라는 정치지형의 문제 등을 진단할 것이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 ○ 성과 및 사례 분석

-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부산지역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 알게 모르게 쌓아둔 성과나 놓쳐버린 기회들이 있었는지,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역할강화와 관련된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본다.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행할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관련 그룹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을 분석한다.

### ○ 발전과제 제안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도출한다. 지방의원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 지방의회 내부의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나아가 중앙과 지방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 해결 등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6년 6월 ~ 2010년 12월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 3. 연구방법

### ○ 의정활동 관련 자료 분석

- 의회자료 : 5분질의, 정책제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
- 기타자료 : 언론보도, 부산시 업무보고 자료, NGO 참관기록 등

### ○ 개별 심층면접

- (전) 현직 비례 및 지역구 여성시의원

6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 시의회 상임위 위원장
- 현직 여성구의원, 의장 혹은 부의장
- 각 정당의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 관련 전문가들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부산시의회 및 구의회 공무원, 연구자, NGO활동가, 언론인 등 15명 내외

#### 4. 기대효과

- 성 주류화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관심 제고
- 성 주류화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화 방안 제시
- 발굴된 부산지역의 모범사례 확산

## Ⅱ

#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12
2. 기초의회 의정활동 분석 :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의회	43
3.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시사점	64

이 장에서는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의회 중 남구의회, 해운대구의회, 사상구의회 등 세 곳이다. 당초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전체를 분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 제한된 연구기간에 16개 구군의 기초의회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를 위해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초점 그룹면접조사 등을 통해 기초의회를 선별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기초의회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적어도 3개의 기초의회를 선정해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별의 기준은 전국 최초로 여성 의원이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부산 남구의회, 부산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많아 기초의회 의원이 많은 해운대구의회,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친 여성이 구청장으로 선출된 사상구<sup>1)</sup> 의회 등으로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와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분석한 의정활동의 자료는 5대 광역 및 기초의회와 6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일부이다. 5대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며 6대는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다.

의회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했다. 첫째, 성별로 나누어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의회내 여성의 주류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았다. 성 주류화는 기존 여성대상의 정책을 넘어 일반 정책까지도 기존 제도의 성차별적 부당성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성 주류화의 목표를 의정활동의 당사자인 의원의 성별에 따라 접근하면 여성의원이 다양한 정책의 성별 영향을 고려할 확률이 높다는 가정이 부산의 지방의회에서도 성립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 의원이 각자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살펴봄으로

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은 제5대 기초의회 시기에는 남성 구청장이었고, 제6대 기초의회 시기인 2010년 7월 여성 구청장이 취임하였다. 여성 구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성정책 관련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 10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써 젠더 관점의 주류화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정책 영역에 대한 의정활동을 분석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 영역을 여성 관련 정책 영역과 여성 관련 이외 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경우 무엇이 여성 관련 정책인지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정책의 정의에 따랐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제3조 1)’이다. 본 연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의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으로 분류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거나, 여성정책 부서의 업무이기에 여성정책으로 분류되는 정책이 그 대상이다.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분석할 경우,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을 구분해서 비교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며, 성별 구분을 배제하고 의정활동 자체만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정활동 기록에는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여성의원이고 누가 남성의원인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별 구분을 통해 남녀간 비교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 역시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했다. <표 II-1>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틀로 정리하면 의원의 성별은 여성의원 의정활동인 ‘나’ 영역에서, 그리고 정책 영역은 여성 관련 정책인 ‘가, 나’ 영역에서 좀 더 초점을 두었고 분석했다.

〈표 II-1〉 의정활동 관련 자료 분석틀

의원 성별 구분 정책영역 구분	남성의원	여성의원
여성 관련 정책 영역	가	나
여성 관련 이외 정책 영역	다	라



부산광역시의회와 각 구의회 의정활동 자료를 성 주류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분석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은 회의시간 209,169분, 속기시간 138,196시간, 회의록 93,504면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부산광역시의회, 2008b: 135; 부산광역시의회, 2011a: 128). 각 구의회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의회보다 자료가 적지만 이 역시 분석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연구대상인 부산시의회와 3개구 의회의 전체 회의록에 대한 검토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하의 내용은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이라는 성 주류화의 관점에 꼭 맞는 자료는 아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세 가지 주류화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의정활동 자료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살펴본 기록 자료의 한계, 지방의원 활동의 한계, 나아가 연구자의 연구역량의 한계 등으로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 가. 기본현황

#### 1) 의원 수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sup>2)</sup>를 통해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원 수를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수

(단위 : 명, %)

구 분	의원 수		
	전 체	남 성	여 성
제5대	47	41(87.2)	6(12.8)
제6대	53	48(90.6)	5(9.4)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참조

2006년 7월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구성 당시의 의원은 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명으로 47명이었고, 성별은 남성 42명, 여성 6명이었다. 여성의원은 지역구 2명, 비례대표 4명이었다. 제5대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 평균 12.1%이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여성의원 비율(12.8%)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10년 구성된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설치됨에 따라 의원정수는 53명으로 늘어났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명, 교육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의원은 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 등 5명이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9.4%로 전

2)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의 성별이 분리된 통계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은 의회 홈페이지라는 공식적인 정보전달 수단에 의원의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상에 주목했다. 성 주류화를 위해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여년 전이다. 모든 논의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성별로 분리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의회가 성 주류화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 평균 14.8%보다 낮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숫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국 평균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부산에서 한나라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지역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4대까지의 정당별 당선자 현황을 보면 역대 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의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다<sup>3)</sup>. 이러한 상황은 5~6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부산지역의 정치·행정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주류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특정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정치 환경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주류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의회의 성 주류화라는 새로운 변화 기류를 수용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민선 1대~4대까지 부산시장 당선자는 모두 한나라당(구, 민자당 포함) 소속이다. 역대 부산시의원 당선자도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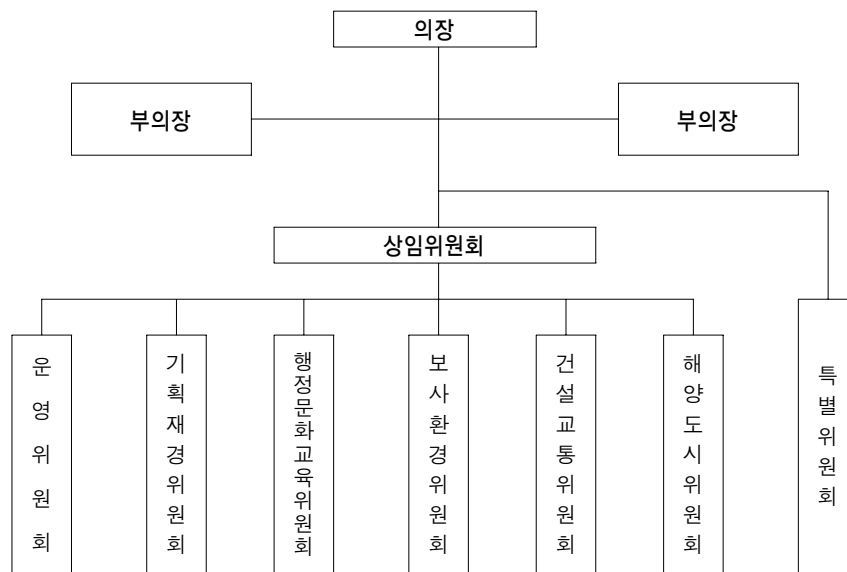
〈표〉 역대 부산시의회 정당별 당선자 현황

대수(선거일)	시의원수	정당별 당선자 현황	
		민자당·한나라당	기타
제1대(1991.3.26)	51명	민자당: 50명(98.0%)	무소속: 1명(2.0%)
제2대(1995.6.27)	61명	민자당: 54명(88.5%)	민주당: 2명(3.3%), 무소속: 5명(8.2%)
제3대(1998.6.4)	49명	한나라당: 46명(93.9%)	국민회의: 2명(4.1%), 자민련: 1명(2.0%)
제4대(2002.6.13)	44명	한나라당: 42명(95.4%)	새천년민주당: 1명(2.3%), 민주노동당: 1명(2.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참조해 재구성.

## 2) 의회 구성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림 II-1] 제5대 부산광역시의의회 구성

위원회는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2006년 7월 구성된 부산광역시의의회는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필요시 구성되는 기타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다.

「부산광역시의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의회는 수개

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회는 제5대와 제6대에서 여성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가 없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회가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한 번뿐이다. 2001년 2월 27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봉화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 여성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다<sup>4)</sup>.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 여성정책 관련 소관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기준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표 II-3>과 같다.

---

4) 2001년 제104회 시의회에 제출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5회의 여성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여성정책 업무보고 청취, 정책질의, 안전심의와 함께 총 10회의 간담회 개최, 6곳의 여성복지시설 현장 확인, 그리고 1회의 자문위원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부산여성개발원의 건립, 여성발전기금의 확대조성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특별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여성정책 공무원들이 추진해왔던 세 가지 주요이슈를 다루었다.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 가지가 시책으로 뿌리 내는데 도움이 되었고 평가받았다. 이처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구성했던 여성특별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인지 의회 내에 ‘여성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제6대 시의회 의장인 제종모 의장이 5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출마했을 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록 의회 내부의 사정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공약을 제시할만큼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히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장에 정리했다.

〈표 Ⅱ-3〉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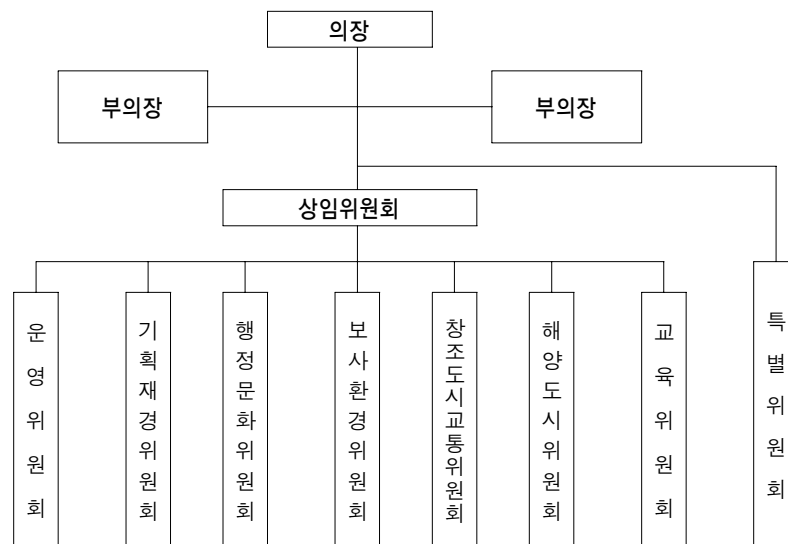
위원회명	위원수	소관 사항
운영위원회	11명(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li> <li>·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재경위원회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투자유치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경제산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행정문화교육위원회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보사환경위원회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복지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건설교통위원회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도시개발실 건설방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해양교통위원회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도시개발실(건설방재관·건축정책관을 제외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2008b: 22-23.

보사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청원심사, 기타 현안문제 등을 처리했다(부산광역시의회, 2008b: 6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는 여성정책, 여성 인력 개발,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저출산 대책,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시설, 아동복지, 보육정책, 보육지원 등이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는 7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었다. <그림 II-2>와 같이 7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해양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이다.



[그림 II-2]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구성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각 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표 II-4>와 같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여성가족 관련 정책 영역인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환경공단 등이었다. 제5대와 비교하여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영역도 여성정책, 여성 인력 개발,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저출산 대책,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육성, 청소년 보호시설, 아동복지, 보육정책, 보육지원 등으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표 II-4〉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

위원회명	위원수	소관 사항
운영위원회	13명(겸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재경위원회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투자기획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행정문화위원회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보사환경위원회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복지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환경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창조도시교통위원회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도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도시개발해양위원회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 낙동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교육위원회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 나. 자치법규 제·개정

의안은 시장,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폐기된다.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결의안) 등이 있으며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질의와 토론신청자가 없을 경우 바로 표결한다(부산광역시의회, 2008b: 24).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은 <표 II-5>와 같다.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전체 759건을 처리했다. 처리 안건의 유형을 보면 조례안 439건, 동의(승인)안 37건, 결의안 10건, 건의안 12건, 규칙안 7건, 의견청취 64건, 기타 138건이다. 이처럼 처리 안건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은 조례안이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광역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례로 대표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5>와 같이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처리한 여성정책과 연관된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부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20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표 Ⅱ-5〉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 처리 현황

(2006. 7. 1~2010. 6. 30)

유형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대안 폐기	보류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759	759	740		4	2	0	5	8	0	0
				625	115							
예산(결산)안		52	52	28	24	0	0	0	0	0	0	0
조 례 안	소계	439	439	359	67	2	2	0	5	4	0	0
	의원	47	47	18	19	1	1	0	4	4	0	0
	시장	319	319	274	42	1	1	0	1	0	0	0
	교육감	47	47	41	6	0	0	0	0	0	0	0
	위원회	26	26	26	0	0	0	0	0	0	0	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0	0
동의(승인)안		37	37	32	2	1	0	0	0	2	0	0
결의안		10	10	10	0	0	0	0	0	0	0	0
건의안		12	12	10	0	1	0	0	0	1	0	0
규칙안		7	7	7	0	0	0	0	0	0	0	0
의견청취		64	64	41	22	0	0	0	0	1	0	0
기타		138	138	138	0	0	0	0	0	0	0	0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16건의 조례 중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진행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며, 나머지는 부산광역시장의 제출한 조례이다. 또한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11건이 원안 가결의 형태로 처리되었고, 5건이 수정 가결의 형태로 처리되었다.

〈표 Ⅱ-6〉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조례

조 례 명	제 안 자	본회의 처리 일자	비 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	2007. 6. 11.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2007. 10. 1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시장	2008. 3. 21.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시장	2008. 3. 21.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모·부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2008. 6. 30.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2008. 7. 25.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2008. 10. 24.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장	2008. 10. 24.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숙희(여) 외 11명	2009. 6. 30.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시장	2009. 7. 24.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시장	2009. 7. 24.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시장	2009. 12. 15.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2010. 2. 23.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2010. 2. 23.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에 관한 조례안	시장	2010. 4. 9.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2010. 4. 9.	원안 가결

참고 :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기준임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8b; 2011a)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표 Ⅱ-7>과 같이 4건이다.

〈표 Ⅱ-7〉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여성의원 발의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

조례명	제안자	제안일자	비고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현영희(여) 외 10명	2007. 4. 1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김영희(여) 외 16명	2008. 12. 18.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숙희(여) 외 11명	2009. 5. 13.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강성태(남) 외 9명	2009. 9. 11.	보류

자료 : 부산광역시의의회(2008b;2011a)

이 중 3건의 원안 가결되거나 수정 가결되고, 1건은 보류되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시장이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토록 함(안 제6조).
-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함(안 제7조).
-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및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지정과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0조, 11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 공무원·시민단체 대표·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함(안 15조 내지 20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일상생활 또는 사회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토록 하고(안 제3조)
-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업·폐업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위원회로 대체(안 제5조)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 등이다.

원안·수정 가결된 3건의 조례 중 여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뿐이고, 나머지 2건의 경우에는 여성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 하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를 제기해 조례를 제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수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원안 가결 혹은 수정 가결된 조례는 모두 보사회환경위원회 소속 여성의원이 앞장 서 제안한 것이다. 여성의원은 남성의원과 의회로 진입하는 배경이 다르고, 여성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시의회에서 조례 및 예산 등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어려운 소수자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으나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예산확보 형태가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안 제정에 기여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여성의원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보류되기는 했지만 남성의원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여성정책과 연관 있는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은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라는 성별구분을 넘어서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여성의원의 몫이라고 여겼던 남성의원도 부산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여성문제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젠더 관점의 주류화는 의회 내에서 의원이 젠더 관점을 주류화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환경이 의원의 역할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의회가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선도할 수도 있지만 의회 밖에서 여성단체나 전문가 집단이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도록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기간 중에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처리된 조례안은 103건이다.

〈표 Ⅱ-8〉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 처리 현황

(2010. 7. 1 ~ 2011. 5. 12)

유형별		접수	처리	처리 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대안 폐기	보류	철회		기타
				원안	수정							
총계		190	164	154		1	1	2	3	3	0	26
			125	29								
예산(결산)안		9	6	0	6	0	0	0	0	0	0	3
조 례 안	소계	103	88	66	17	0	1	2	1	1	0	15
	의원	27	19	9	9	0	0	1	0	0	0	8
	시장	51	45	37	5	0	1	1	0	1	0	6
	교육감	22	21	17	3	0	0	0	1	0	0	1
	위원회	3	3	3	0	0	0	0	0	0	0	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0	0
동의(승인)안		20	16	14	1	0	0	0	0	1	0	4
결의안		5	4	3	0	0	0	0	1	0	0	1
건의안		2	2	2	0	0	0	0	0	0	0	0
규칙안		0	0	0	0	0	0	0	0	0	0	0
의견청취		19	19	11	5	1	0	0	1	1	0	0
기타		32	29	29	0	0	0	0	0	0	0	3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2010년 12월까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처리한 여성정책과 연관된 조례는 <표 Ⅱ-9>와 같이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다. 이 조례는 여성의원의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표 Ⅱ-9〉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정책 관련 조례

조 례 명	제안자	본회의 처리 일자	비 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신숙희(여) 외 20명	2010. 12. 22.	수정 가결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 26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분야, 여성기업인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분야를 추가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를 확대함(안 제4조)
-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안 제6조) 등이다.

2010년 12월까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중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여성정책과 관련한 의원 발의 조례는 <표 II-10>과 같이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표 II-1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

조 례 명	제안자	제안일자	비 고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이성숙(여) 외 9명	2010. 9. 30.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신숙희(여) 외 20명	2010. 10. 5.	원안 가결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의회보의 제호를 “부산 의회소식”으로 함(안 제2조)
- 의회보는 회기마다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의회보에는 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건강상식·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의원논단 및 시민참여, 구·군의회 소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토록 함(안 제4조)
- 의회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보편집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의회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나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등이다.

## 다. 예산의 심의·의결

부산광역시의회의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예산안의 심의는 일차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실·국 소관 사항을 예비 심사한다.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안 심의의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시장 및 부교육감의 인사말과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관리국장의 제안 설명 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4일간의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간의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안 심사를 완료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게 되면 예산·결산이 확정된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산을 심의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산광역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여성 정책 관련 예산은 <표 II-11>과 같다. 2007년도 예산안은 양성평등 문화사업비 지원과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사업이 증액되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구군여성합창단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지원시설 건립부지매입비 등이 삭감되었다. 2010년 예산안은 출산 장려 언론 홍보 사업은 삭감되었고, 보육센터건립 지원은 증액되었다. 2011년 예산안은 아동성폭력 예방연

28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론홍보, 출산장려 언론홍보,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 등이 삭감되었다.

〈표 II -11〉 2007~201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의 시의회 심의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안	조정내역		조정결과
			삭감	증액	
2007년	양성평등 문화사업비 지원	20,000		20,000	40,000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40,620		30,000	670,620
2008년	구군여성합창단 지원	10,000	10,000	-	0
	아이돌보미 사업	414,000	102,000	-	312,000
	보육지원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26,000	326,000	-	0
2009년	해당사항 없음				
2010년	출산장려 언론 홍보	200,000	30,000	-	170,000
	보육센터건립 지원	132,000	-	600,000	732,000
2011년	아동성폭력 예방언론홍보	100,000	10,000	-	90,000
	출산장려 언론홍보	170,000	17,000	-	153,000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	20,000	5,000	-	15,000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예산공개 자료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5조 6천억 원 정도이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3천 1백억 원(5.59%) 정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본예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은 없다. 여성정책 원인은 많겠지만 세 가지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산광역시 본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적다. 보육, 가족, 여성 분야를 모두 합해서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59%이며, 이 중에서는 보육 관련 예산이 가장 많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국가사무가 차지한다. 국가사무이기에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비에 광역

자치단체의 부담분(시·도비)이 더해져서 예산이 확정되는 구조의 사업이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다른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광역의회에서 크게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산광역시 본예산의 부산광역시의회 심의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은 국비에 따라 부산광역시비가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자체사업이 많은 것에서 확인된다.

셋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부산광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여성관련 예산에는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관련 예산에 호의적인 이유는 여성정책에 대한 배려,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할 것이다.

## 라.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 하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부산광역시의회, 2008b: 85-86).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나

누어진다. 당연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실·국·본부·관·담당관·과 및 시의회사무처, 사업소), 부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원·센터, 소방서), 지방공기업 등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광역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하고 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부산광역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광역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가능하면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회 실시되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압축되어 있다. 이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가 여성정책, 여성인력개발, 가족복지, 저출산, 다문화, 청소년, 아동복지, 보육정책 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 관련 행정사무감사의 분석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의 처리 의견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12>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06년 8건, 2007년 8건, 2008년 7건, 2009년 6건, 2010년 5건이다. 그러나 시정·처리 요구사항 모두가 여성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

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관실의 담당 업무가 여성정책, 여성인력개발, 가족복지, 저출산, 다문화, 청소년, 아동복지, 보육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이 숫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표 Ⅱ-12〉 2006~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결과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수

연도	감사대상 부서	처리 의견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200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9	8	1
2007년	여성가족정책관실	9	8	1
2008년	여성가족정책관실	9	7	2
2009년	여성가족정책관실	9	6	3
2010년	여성가족정책관실	10	5	5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6; 2007; 2008a; 2009; 20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영역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내용은 양성 차별적인 조향이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 수립, 다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는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의 확대와 활성화 대책,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 부산광역시내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설치 촉구 등이다(표 Ⅱ-13 참조).

〈표 II -13〉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양성차별적인 조항이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 “부녀” 등 양성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양성차별적인 조항이 있는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저출산대책의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확대 등 활성화 촉구	• 가족사랑카드의 참여업체가 미용실 등 일부 업종에 치우쳐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참여 폭을 확대하여 가족사랑카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30%로 확대 추진	• 각종 위원회 조직의 운영에 그 소속집단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 30%이므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참여비율을 확대 추진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구	•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이 되는 각급 공공기관, 대형사업장 등의 미설치 사업장이 많으므로 각급 대학을 비롯한 공공시설 사업장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조치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의 증가와 성매매업소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내실 있는 추진 등이다(표 II -14 참조).

〈표 II -14〉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 및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금지	• 다양한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 대책 마련 •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광고, 특히 성매매를 암시하는 차량을 이용한 길거리 광고는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므로 강력한 근절책 마련
민경보 예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추진	•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획일화 되어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세워서 사업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실익이 없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삭감토록 추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심도 있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추진할 장기계획인데 대부분의 계획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단순한 업무로서 너무 형식적인데 다음 계획수립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별 목표량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내실있게 추진</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7)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의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진 점검, 변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부산광역시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지역별 편중 해소 등이다(표 II-15 참조).

〈표 II-15〉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충실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여성 공무원 확대, 공보육 시설의 확충 등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의 계획과 추진이 미진, 충실히 이행 되도록 조치 강구</li> </ul>
변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한 효율적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방지는 여성, 남성들의 인식에 문제로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li> </ul>
부산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인구가 95년도 이후에 연 1~2만명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특단의 정책을 검토, 시행</li> <li>•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 제고 외에 기업의 역외유출, 주거이동에 따른 가임여성인구의 역외 유출의 방지 및 유인을 위한 경제 정책, 부산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안정성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도 필요</li> </ul>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지역별 편중화 대책 종합적 계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지역은 국공립시설 수도 부족하므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8a)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가족사랑카드 가맹점의 지역 편중 해소, 아동성폭력 예방과 초기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 부산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마련, 정부합동평가 중 미흡한 여성정책 관련 내용 대책 마련 등이다(표 II-16 참조).

〈표 II-16〉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구·군별 가족사랑카드 가맹점 편중화 해소방안 강구	• 가족사랑카드의 가맹업체 수를 늘리는 것에만 주력하기보다 구·군별 가맹점 편중화 해소와 지역별, 업종별 균형 유지 등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실화 방안 강구
아동성폭력 피해예방 및 초기대응방안 강구	• 아동성폭력은 예방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예방 초기대응을 위한 사업시행과 예산지원 필요
부산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부여 방안마련	• 부산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없고 실질적인 혜택부여 방안 마련 필요
부산광역시 여성정책 중 타시·도에 비해 미흡부문 대책마련	• 자치단체별 여성정책 평가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수 및 만족도 증가율, 여성인력활성화 추진실적 등 매우 미흡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마련,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 대책, 결혼중개업소 법률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자체의 대책 마련,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 중 연도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표 II-17 참조).



〈표 Ⅱ-17〉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지원 방안 마련	• 타 시·도는 자치단체와 대학 협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시도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이 요구
다자녀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	• 다자녀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결혼중개업소 법률 개정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 결혼중개업소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시 차원의 정보제공에 대한 별지서식 지정이나 서면계약서 자료 제공방안 검토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시 특정 단체가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10)

이상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보사환경위원회의 여성정책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일 동안 4~5시간 정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가족정책 전반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집중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하자는 대안이 자주 언급된다. 이런 대안은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가 여성정책, 여성인력개발, 가족복지, 저출산, 다문화, 청소년, 아동복지, 보육정책 등이다. 따라서 여성정책 영역에 한정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이슈화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원인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한 광역의회의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 등에 한정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을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한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저출산 문제였다. 이는 당시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는 정책 환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가장 낮은 출산율이 쟁점화 되었기에 이에 따른 공보육의 문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 독자적인 정책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 마. 기타 의정활동

### 1) 시정질문

부산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은 본회의중 기간을 정하여 교육행정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은 2005년 3월부터 일괄 질문·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주고 있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을 한 의원 수는 <표 II-18>과 같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은 71명이 참여했다. 2010년 12월까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은 16명이 참여했다.

〈표 II-18〉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의원 수

구 분		질문 의원 수
제5대	2006년	6명
	2007년	19명
	2008년	23명
	2009년	18명
	2010년(1~6월까지)	5명
제6대	2010년(7~12월까지)	16명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8b: 47; 2011a: 48)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분석

광역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의회의 의정활동 중에 시장, 교육감 등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시정질문이 거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직접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로이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 현안문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 시정질문에서 여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이는 5대 광역의회의 시정질문 중 여성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을 분석한 <표 II-19>에서 확인된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회의 시정질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는 3건뿐이다.

<표 II-19>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회의 시정질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질문일시	질문의원	질문 요지
2007. 3. 28.	김유환(남)	• 나잠어업(해녀) 보호 육성에 대한 부산광역시 대책은 무엇이며, 나잠어업 보호육성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유는
2009. 7. 17.	강성태(남)	• 부산광역시의 중장기 출산 장려정책은 무엇인지 • 부산광역시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Risk는 •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현황과 효과는 • 보육을 위한 사회적 편의시설 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과 향후대책은
2009. 10. 7.	강성태(남)	• 부산시민의 저출산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관련 역점시책은 무엇인지 • 부산광역시의 보육지원 사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 부산광역시의 인구문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의(2008b; 2011a)

5대 부산광역시의회의회의 시정질문 중 여성 혹은 여성정책과 연관된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2명이다. 나잠어업(해녀)을 내용으로 한 시정질문은 여성정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소수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부산광역시의회의회의 보사환경위원회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은 부산광역시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였다. 이와 유사하게 시정질문도 같은 의원이 두 번에 걸쳐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다루었다. 주요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부산광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독자적인 정책 중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현황과 효과,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과 향후대책, 저출산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대책, 부산광역시 보육지원 사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부산광역시 인구문제 종합적인 대책 등이었다.

제5대 광역의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은 정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보였다. 부산광역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출산장려기금 설치를 위해 2009년 12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조성 근거(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조항을 신설하고 2010년부터 연간 100억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시정질문에 참여한 의원은 <표 II-20>와 같이 8명이었다.

〈표 II-2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 내용

질문일시	질문의원	질문 요지
2010. 7. 21.	손상용(남)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조기건설
	허태준(남)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 방안
2010. 10. 12~13.	강성태(남)	저출산 문제점 해결방안 - 부산초중고 졸업 셋째아 4년 대학학자금 지원 - 임신부 및 가족사랑카드 대중교통 완전 무료 - 가족사랑카드 공영주차장 완전 무료화 - 첫째, 둘째 50%, 셋째는 무료급식 제공
	이성숙(여)	도시재생·신빈민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대책
	이대석(남)	국제중·고등학교 증설, 백양산골프장, 산업단지 등
	김길용(남)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 점검 및 대책
	이동윤(남)	고층건물의 화재 안전대책 및 개선
	이병조(남)	강서신도시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가로수 조성 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한 의원이 동일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시정질문의 주요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산초·중·고 졸업 셋째아 4년 대학학자금 지원, 임신부 및 가족사랑카드 대중교통 완전 무료, 가족사랑카드 공영주차장 완전 무료화, 첫째와 둘째는 50%와 셋째는 무료급식 제공 등이었다.

## 2) 5분자유발언

부산광역시의회의 5분자유발언은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광역의원은 시정질문이나 안전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다. 이에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5분자유발언이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많은 의원이 시정현안 또는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하며 시정질문과 다르게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부산광역시의회, 2011a: 48).

부산광역시의회의 5분자유발언은 단지 발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게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의원이 한 발언 내용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상임위원회를 통해 전 의원에게 공람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 발언 의원에게 추진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부산광역시의회, 2011b: 229-230).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여 의원 수는 <표 II-21>과 같다. 제5대에는 167명이 5분자유발언을 하였고, 제6대에는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0명이 하였다.

〈표 II-21〉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여 의원 수

구 분		참여 의원 수
제5대	2006년	3명
	2007년	30명
	2008년	39명
	2009년	64명
	2010년(1~6월까지)	31명
제6대	2010년(7~12월까지)	40명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11a: 49)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현안은 발언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는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중에서 여성정책과 관련 내용이 4건인 것에서 확인된다(표 II-22 참조).

〈표 II-22〉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발언일시	발언의원	발언 요지
2008. 12. 15.	이영숙(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저수준인 부산광역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촉구</li> <li>• 첫째, 1,000억 규모의 상징적이고도 홍보효과가 큰 출산장려기금을 조성</li> <li>• 둘째, 부산광역시만의 획기적이고 유일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li> </ul>
2009. 1. 14.	김영희(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이주민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방향</li> <li>• 일방적으로 이주여성에게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남편들과 가족들도 이주여성의 모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ul>

발언일시	발언의원	발언 요지
2009. 5. 7.	김성우(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각종위원회(협의체)의 정비 필요</li> <li>•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40%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여성 위촉위원은 총 2,292명 중 429명으로 18.7%밖에 되지 않아 목표인 40%의 절반도 되지 않음</li> </ul>
2010. 2. 23.	안성민(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가정의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li> <li>•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생활에 녹아드는 정책 필요</li> <li>•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원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 등으로 학원비 경감 필요</li> <li>• 자녀가정의 편의를 위해 5인용 택시의 도입</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2008b; 2011a)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5분자유발언 4건에는 전체 내용이 여성정책과 관련되어 있거나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건의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부산광역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촉구,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적 포용성 제고,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제고,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정책 필요 등이다. 발언한 의원의 여성 2명, 남성 2명이다. 여성정책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 여성의원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 것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부산광역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온 1,000억 규모의 상징적이고 홍보효과가 큰 출산장려기금 조성의 경우에는 앞에서 시정질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2009년 12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010년부터 연간 100억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표 II-23>와 같이 3건이다. 제5대와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건이기에 제5대의 4년 동안의 실적과 비교하면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5분자유발언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23〉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발언일시	발언의원	발언 요지
2010. 9. 31.	이주환(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범죄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사전예방의 중요성</li> <li>단기적 예방정책으로 범죄예방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순찰 강화, 방범보안등 추가 설치, 온·오프라인 유해환경의 차단을 위한 단속과 점검 강화</li> <li>중기 예방정책으로 재개발지역 내의 폐·고가 등 주거취약지역 정비,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관심과 배려로 보호하는 복지정책 강화</li> <li>장기 예방정책으로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 개선, 교육과 홍보, 성폭력범죄 예방 특별위원회 가동</li> </ul>
2010. 10. 5.	김름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개선방안</li> <li>첫째,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와 같은 직업여성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및 기관 전문성 강화</li> <li>둘째, 프로그램의 성별 분리현상이 극복</li> <li>셋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과 사회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li> <li>넷째, 주기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수립</li> <li>다섯째, 성별분리통계의 일반화와 지역통계 제공수준 제고</li> </ul>
2010. 12. 22.	김름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li> <li>부산에는 6곳의 쉼터가 있지만, 여성노숙인 전용쉼터 부재</li> </ul>

자료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분석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전체 혹은 부분에서 포함된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대책 마련,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력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숙인 중 여성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여성의원 한 명이 2건의 여성정책 관련 5분자유발언을 했고, 1건은 남성의원이 했다. 의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현상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의 5분자유발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5대와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발언은 많지 않다. 발언한 내용도 여성정책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과 유사하다. 발언하는 시기의 부산광역시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오랜 시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과제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여성의원의 경우가 여성문제를 발언한 경우가 남성의원이 발언한 경우보다는 약간 많다. 여



성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남성의원의 5분자유발언도 여성의원과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 기초의회 의정활동 분석 :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의회

### 가. 기본현황

#### 1) 의원 수

제5대와 제6대 각 구의회 의원 수는 <표 II-24>과 같다.

<표 II-24> 구의회별 의원 수

(단위 : 명(%))

구분		의원 수		
		전체	남성	여성
남구	제5대	15	11(73.3)	4(26.7)
	제6대	15	13(86.7)	2(13.3)
해운대구	제5대	17	14(82.4)	3(17.6)
	제6대	17	13(76.5)	4(23.5)
사상구	제5대	12	10(83.3)	2(16.7)
	제6대	12	11(91.7)	1(8.3)

자료 : 각 구의회 홈페이지 참조

제5대와 제6대 남구의회 의원은 15명이다. 여성의원은 제5대에는 15명 중 4명, 제6대에는 15명 중 2명이다.

제5대와 제6대 해운대구의회는 17명이다. 여성의원은 제5대에는 17명 중 3명, 제6대에는 17명 중 4명이다.

제5대와 제6대 사상구의회는 12명이다. 여성의원은 제5대에는 12명 중 2명, 제6대에는 12명 중 1명이다.

남구의회와 사상구의회는 여성의원수가 제6대에 제5대에 비해 줄었고,

해운대구의회의는 늘었다. 제5대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 평균 15.1%이다. 남구의회(26.7%), 해운대구의회(17.6%), 사상구의회(16.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제6대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 평균 21.7%이다. 남구의회(13.3%), 사상구의회(8.3%)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해운대구의회(23.5%)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 2) 의회 구성

각 구의회도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5대 각 구의회 구성은 <표 II-25>와 같다.

〈표 II-25〉 구의회별 의회 구성

구 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남 구	제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li> <li>• 총무위원회</li> <li>• 주민복지도시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제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li> <li>• 총무위원회</li> <li>• 주민복지도시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해운대구	제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위원회</li> <li>• 기획관광행정위원회</li> <li>• 주민도시보건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제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위원</li> <li>• 기획관광행정위원회</li> <li>• 주민도시보건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사 상 구	제5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위원회</li> <li>• 총무위원회</li> <li>• 사회도시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제6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위원회</li> <li>• 기획행정위원회</li> <li>• 사회 · 도시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li> </ul>

자료 : 각 구의회 홈페이지

각 구의회는 공통적으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며, 운영위원회는 겸직하고 있었다.

남구의회는 제5대와 제6대에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제5대와 제6대에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상구의회는 제5대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 6월 기준 제6대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기초의회의 위원회 명칭이 바뀐다고 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 사항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위원회 명칭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의 명칭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제5대와 제6대 각 구의회 여성정책 소관은 <표 II-26>과 같다.

〈표 II-26〉 구의회별 위원회 중 여성정책 소관 사항

구분	위원회	소관 사항
남구의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li> <li>- 주민생활국 업무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여성의 지위향상·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li> </ul>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li> <li>-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가정·여성·아동복지에 관한 사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제2항 제5호)</li> </ul>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li> <li>- 복지환경국 업무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노인·여성·아동·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 제6호)</li> </ul>

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각 구의회의 여성정책 관련 소관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와 연관된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가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민생활국 업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 제3호에 여성 관련 내용은 ‘여성의 지위향상·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민생활국 업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 제2항 제5호에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가정·여성·아동복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동주민센터 업무 중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2011년 6월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복지환경국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 제6호에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노인·여성·아동·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자치법규 제·개정

앞의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에서 광역의회가 처리하는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처리였다. 기초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처리이다.

제5대와 제6대 기초의회 기간 중 2006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각 구의회가 처리한 조례 현황은 <표 II-27>과 같다.

남구의회는 처리한 조례는 181건이며, 발의 주체는 의원 발의 51건, 구청장 제출 130건이다. 해운대구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154건이며, 발의 주체는 의원 발의 35건, 구청장 제출 119건이다. 사상구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155건이며, 발의 주체는 의원 발의 26건, 구청장 제출은 129건이다.

〈표 Ⅱ-27〉 구의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2006. 7. 1 ~ 2010. 12. 31)

구 분		처 리 내 용		
		소 계	가 결	
			원안	수정
남구의회	소계	181	162	19
	의원	51	44	7
	구청장	130	118	12
해운대구의회	소계	154	103	51
	의원	35	27	8
	구청장	119	76	43
사상구의회	소계	155	111	44
	의원	26	26	-
	구청장	129	85	44

참고 : 계류·철회된 조례안을 제외하고 처리된 조례안만 분석

자료 : 남구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해운대구청 통계연보; 사상구의회 회의록; 사상구청 통계연보

제5대와 제6대 임기 중 2010년 12월까지 각 구의회가 처리한 조례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28>과 같다.

〈표 II-28〉 구의회별 여성정책 관련 조례안 처리 현황

(2006. 7. 1 ~ 2010. 12. 31)

조례명		제안자	본회의 처리 일자	비고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09. 2. 13.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진남일(남) 외 5인	2010. 4. 1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손애휘(여) 외 6인	2010. 1. 2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명현(남) 외 5인	2010. 4. 19.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	정혜숙(여) 외 7인	2010. 12. 2	원안 가결
해운대구의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구청장	2006. 12. 12.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09. 4. 20.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이복휘(남) 외 9인	2009. 7. 2.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최낙만(남) 외 10인	2009. 12. 24.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2010. 12. 21.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조송은(여) 외 2인	2010. 12. 21.	원안 가결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남구의회 회의록; 해운대구의회(2011);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사상구의회 회의록

남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의원의 대표 발의한 조례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

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다.

해운대구의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처리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다.

사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6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제5대와 제6대 임기 중 2010년 12월까지 각 구의회가 처리한 조례 중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와 의원 발의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례 현황은 <표 Ⅱ-29>와 같다.

<표 Ⅱ-29> 구의회별 여성의원 및 여성정책 관련 의원 발의 조례안 처리 현황  
(2006. 7. 1 ~ 2010. 12. 31)

조 례 명		제안자	본회의 처리 일자	비 고
남구의회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순(여) 외 4인	2008. 6. 20.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영순(여) 외 4인	2008. 12. 22.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애휘(여) 외 4인	2009. 3. 23.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순(여) 외 4인	2009. 3. 23.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춘열(여) 외 5인	2009. 6. 26.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손애휘(여) 외 6인	2009. 7. 15.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손애휘(여) 외 6인	2009. 9. 28.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	송순임(여) 외 5인	2010. 4. 19.	수정 가결

조 례 명		제안자	본회의 처리 일자	비 고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진남일(남) 외 5인	2010. 4. 1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 례안	손애휘(여) 외 6인	2010. 1. 29.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 원 조례안	정혜숙(여) 외 7인	2010. 12. 2.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안	손애휘(여) 외 6인	2010. 12. 2.	원안 가결
해운대구의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복휘(남) 외 9인	2009. 7. 2.	수정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최낙만(남) 외 10인	2009. 12. 24.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형균(여) 외 4인	2010. 9. 15.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	김광모(남) · 김진연(여) 외 8인	2010. 11.1.	수정 가결
사상구의회	사상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안	김옥남(여) 외 3명	2009. 12. 17.	원안 가결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 원 조례안	조송은(여) 외 2인	2010. 12. 21.	원안 가결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남구의회 회의록; 해운대구의회(2011);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사상구의회 회의록

남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  
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건정한 읍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  
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  
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  
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출



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의원 발의했다.

남구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여성의원이 의원 발의의 형태로 처리된 것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7조),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7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등이다.

남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도 특징적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 적응교육·직업훈련,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등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등이다.

남구의회는 제6대에 오면서 6개월이란 짧은 의정기간에도 2명의 여성의원이 각각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원기준, 지원대상 범위,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7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등이다.

해운대구의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 등 4건을 의원 발의했다. 여성정책과 직접 관련된 출산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 모두 남성의원이 의원 발의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적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함(안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교육·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안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4조),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안 제6조) 등이다.

사상구의회는 「사상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의원 발의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6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의원 발의한 조례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문화가족의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

력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의 지원사업(안 제4조),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안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3조) 등이다.

부산광역시 남구·해운대구·사상구의회는 자치법규 제·개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과 관련한 조례안의 제출이 의원의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의원이,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운대구의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남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둘째, 여성의원도 여성정책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었다. 이는 남성의원도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표 발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모습이다.

## 다. 예산의 심의·의결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예산의 심의·의결도 중요한 의결권의 주요한 내용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5대와 제6대 기초의회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구청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각 구청의 본예산 기준으로 각 구의회에서 심의하여 조정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표 Ⅱ-30>과 같다.

〈표 II -30〉 구의회별 2007년도~2011년도 예산 중 여성정책 관련 심의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안	조정내역		조정결과	비고
			삭감	증액		
남구의회	2007	해당사항 없음				
	2008	해당사항 없음				
	2009	해당사항 없음				
	2010	해당사항 없음				
	2011	해당사항 없음				
해운대구의회	2007	해당사항 없음				
	2008	회의록 확인 불가				
	2009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 부상	500	500	0	선거법 위반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	1,700	1,700	0	선거법 위반
	2010	해당사항 없음				
	2011	해당사항 없음				
사상구의회	2007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등 지원	3,000		1,000	4,000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71,500		480,215	3,151,715
	2008	해당사항 없음				
	2009	보육시설 난방비	36,000		17,300	53,300
	2010	직원자녀 보육수당 및 지원금	91,200	7,200		84,000
		여성행사	4,000		3,000	7,000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지원	6,000		3,000	9,000
	2011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0	50,000		0
		여성행사	7,000	3,000		10,000

자료 : 각 구의회 회의록 분석

남구의회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안 중 구의회 심의에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조정된 내역이 없다.

해운대구의회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안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의 심의조정은 2009년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 부상’, ‘동백

여성글자랑대회 시상' 두 항목이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된 두 항목은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보다는 예산안 심사시점인 2009년말 기준으로 이후에 실시되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 영향을 미쳐 삭감됐다.

사상구의회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 등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육시설 난방비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구청 공무원의 보육수당 및 지원금 예산은 줄이고, 여성행사와 출산장려 및 보육행사지원 예산은 늘렸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전액 삭감하고 여성행사 지원금은 늘렸다.

부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1천 666억 원 정도이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225억 원(13.5%) 정도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천 737억원 정도이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388억 원(14.2%) 정도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일반회계 본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1천 864억 원 정도이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은 276억원(14.8%) 정도이다. 이 중에서 각 구의 예산은 보육 관련 예산이 가장 많다(각 구청 홈페이지 예산내역 참조).

앞의 광역의회의 예산의 심의·의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광역의회는 예산안 심의 조정에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는 적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정책 관련 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는 원인은 광역의회의 분석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각 구의 본예산 전체에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적다. 또한 여성정책이 국가사무인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 라. 행정사무감사

우리나라 지방자치체는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감시권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가 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는 정기적으로 연 1

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제5대와 제6대 각 구의회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06년도 각 구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II-31>과 같다.

<표 II-31> 구의회별 2006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남구의회	각급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 및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 각급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이 저조하므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및 다양한 위원 위촉	•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적으므로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
	성희롱 예방교육 미흡	• 구청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외국인 여성 이주자 관리실태 소극적 처리	• 외국인 여성을 위한 이주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소극적인 처리
해운대구의회	해당사항 없음	
사상구의회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 강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가정폭력상담소 효율적 운영방법 검토	• 관내 가정폭력상담소 활동 사항 미흡. 관내 법률구조법인 가정법률상담소 부산시지부는 상담실적인 높은 편. 두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자료 : 남구의회(2007); 해운대의회(2011); 사상구의회 회의록

남구의회는 각급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확대, 남구청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 강화, 외국인 여성 이주자 관리의 강화 등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사상구의회는 직원 중 다자녀가구 지원 방안과 가정폭력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2007년도 각 구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32>와 같다.

남구의회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서비스 강화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사상구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표 Ⅱ-32> 구의회별 2007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남구 의회	외국인 이주자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서 비스 실적 저조	• 증가하는 외국인 이주자 등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 서비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해운대 구의회	해당사항 없음	
사상구 의회	주민자치위원 여성 위원 확대	•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동장은 30%이상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자료 : 남구의회(2008); 해운대의회(2011); 사상구의회 회의록

2008년도 각 구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33>과 같다.

남구의회는 보육시설 관리와 감독 강화,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임산부 철분제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강화 등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사상구의회는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인상과 유치원 난방비 지원, 불법 성매매 행위 단속 강화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표 II-33〉 구의회별 2008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남구의회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 대기자가 있음에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정원에 못미치게 현원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장 지도·감독 철저	•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장 중 설계와 실공사가 상이한 경우와 장기간 공사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설장에게만 공사감독을 일임하지 말고 구청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적절한 지원 조치	• 특정 어린이집만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에도 적절히 지원
	도시국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도시국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하니 여성위원을 영입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예산 편성 철저	• 임산부 철분제 구입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시 부족하지 않게 편성
해운대구의회	해당사항 없음	
사상구의회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인상 및 유치원 난방비 지원	•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현실에 맞지 않기에 인상 필요. 다른구는 유치원 난방비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에 지원 필요
	불법 성매매 행위 단속 철저	• 지역내 불법 성매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근절되도록 조치 필요

자료 : 남구의회(2009); 해운대구의회(2011); 사상구의회 회의록

2009년도 각 구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II-34>과 같다.

남구의회는 보육시설 통학버스의 안전 점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 철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등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사상구의회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불임부부사업 홍보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설치,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책 추진 등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표 Ⅱ-34〉 구의회별 2009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남구의회	보육시설 통학버스 유아용 보호용 장구 등 설치 조치	• 보육시설 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 발판, 등화장치를 설치 후 운행하여야 하나 아직 미설치된 통학버스가 많으니 점검 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표 작성 철저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시 시설의 운영부분에 높은 배점을 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심사 기준표를 잘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
	24시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배치 철저	• 24시간 보육시설의 경우 야간에 보육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반드시 보육교사가 야간에 배치되도록 조치
	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도시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위원회별로 30%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운대구의회	보육시설 관리 감독 철저	•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의대여 등 교사관련 문제는 제도적 개선 조치
사상구의회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호 개방	• 타 구·군은 국장과 총무과장으로 여성공무원을 보직하는 등 여권신장이 향상, 사상구도 여성공무원에게 문호 개방 필요
	불임부부사업 홍보 철저	• 보건소에서 불임부부사업 지원 홍보 필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인구감소 대처방안 강구	• 출산장려를 위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개설과 임신부를 위한 동단위 특수시책 추진

자료 : 남구의회(2010); 해운대구의회(2011); 사상구의회 회의록

2010년도 각 구의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표 Ⅱ-35>와 같다.

남구의회는 시정요구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건의사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출산장려정책 적극 홍보 등이 들어있다.

해운대구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사상구의회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보육평가인증제 참여 확대, 다문화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재검토를 시정·처리 요구했다.

〈표 Ⅱ-35〉 구의회별 2010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구분	시정·처리 요구사항	내용 요약	비고
남구 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확대	•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미흡, 위 원 구성시 여성위원이 40%까지 확대	건의사항
	오륙도 여성대학 참여 연령 조정	• 오륙도 여성대학은 30대부터 70대까지 운영되어 연 령별 수준별 강의 어려움. 30~50대에 맞는 강의를 하고 60대 이후는 노인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남녀 구분 경로당 통 합 방안 강구	• 남녀로 구분된 경로당은 1군데로 통합·운영하여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	
	출산장려정책 적극 홍보	• 난임부부시술, 인공수정 시술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 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적극 홍보	
해운대 구의회	위원회 전체별로 여 성위원 확대	• 위원회의 여성 위축이 10% 내외 또는 보여주기 시 금로 1~2명 위축	
사상구 의회	보육시설 행정처분 철 저 및 지도점검 강화	• 보육시설 행정처분시 신중을 기하고 지도점검을 강화	
	보육평가인증제 참여 확대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미참여 시설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 강구	
	다문화종합지원센터 건립 재검토	• 구청장 공약사항 중 다문화종합지원센터는 재검토 후 조치	

자료 : 각 구의회 회의록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 보육시설 지원과 관리 감독 강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 다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이다.

이 주제는 분석한 3개 구의 여성정책의 큰 틀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시점의 사회적 쟁점을 다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마. 기타 의정활동

### 1) 구정질문

기초의회의 구정질문은 광역의회의 시정질문과 성격이 동일하다. 본회의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는 제도이다. 구정질문의 경우도 광역의회의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기초의회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해당 상임위원회 이외의 실·국장과 직접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광역의회의 시정질문과 유사하게 기초의회의 구정질문도 지역구 현안문제,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회문제 등을 주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구정질문에서 여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이는 제5대와 제6대 임기 중 2010년 12월까지 각 구의회의 구정질문 중 여성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을 분석한 <표 II-36, 37>에서 확인된다. 각 구의회별 구정질문에 참여한 의원 수는 남구의회 31명, 해운대구의회 45명, 사상구의회 16명이다.

<표 II-36> 구의회별 구정질문 참여 의원 수

(2006. 7. 1 ~ 2010. 12. 31)

구 분	참여 의원 수
남구의회	31명
해운대구의회	45명
사상구의회	16명

참고 : 실인원이 아닌 연인원임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해운대구의회(2011); 각 구의회 회의록

남구의회와 구정질문 중 여성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은 1건뿐이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와 사상구의회 구정질문 중 여성정책과 관련 있는 내용은 없다.

〈표 II-37〉 구의회별 의회 구정질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2006. 7. 1 ~ 2010. 12. 31)

구분	질문일시	질문의원	질문 요지
남구의회	2009. 3. 23.	송순임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일자리 창출</li> <li>- 여성일자리는 일하고 가정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고용 형태가 많은 OECD국가와 같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li> </ul>
해운대구의회	해당사항 없음		
사상구의회	해당사항 없음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해운대구의회(2011); 각 구의회 회의록

## 2) 5분자유발언

기초자치단체의 5분자유발언도 광역의회와 유사하게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제5대와 제6대 임기 중 2010년 12월까지 각 구의회의 5분자유발언에 참여한 의원 수는 <표 II-38>과 같다. 5분자유발언한 참여한 의원 수는 남구의회 47명, 해운대구의회 47명, 사상구의회 11명이다.

〈표 II-38〉 구의회별 의회 5분자유발언 참여 의원 수

(2006. 7. 1 ~ 2010. 12. 31)

구 분	참여 의원 수
남구의회	47명
해운대구의회	47명
사상구의회	11명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해운대구의회(2011); 각 구의회 회의록

제5대와 제6대 임기 중 2010년 12월까지 구의회의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은 <표 II-39>와 같다.

〈표 Ⅱ-39〉 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

(2006. 7. 1 ~ 2010. 6. 30)

구분	발언일시	발언 의원	발언 요지
남구의회	2010. 7. 28.	공명현(남)	•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체 구성
해운대 구의회	2009. 4. 10.	이복휘(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자체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계획 수립 필요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10개 구·군이 구 자체 출산축하금 지급, 미지급 6개구에 해운대구가 포함
	2010. 12. 16.	김진영(여)	• 해운대구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방향이 취업의 사각지대인 중년, 고령, 여성에게 맞춤 일자리 제공
사상구 의회	2007. 4. 27.	윤숙희(여)	•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 •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배려 •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2007. 9. 17.	김옥남(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
	2010. 7. 30.	조홍래(남)	• 사상구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 등 시책사업이 미흡
	2010. 12. 16.	심재환(남)	•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위해 0~12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자료 : 남구의회(2007;2008;2009;2010), 해운대구의회(2011); 각 구의회 회의록

제5대 남구의회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한 의원이 없었다. 제6대 들어서는 남성의회원이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체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했다.

제5대 해운대구 의회의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과 관련있는 내용은 1건이며 남성의회원이 했다. 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대구 자체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조례 제·개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경우 2009년 7월 2일에 이 주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사례는 남성의회원이 출산문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과 조례 제정을 연계시키는 의정활동을 성과를 보여주었다.

제6대 해운대구의회에서 여성위원이 구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방향과 관련하여 취업의 사각지대인 중년·고령·여성에게 맞춤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5분자유발언했다.

제5대 사상구의회는 여성의원 2명이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했다. 내용은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담은 5분자유발언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담은 5분자유발언이었다.

제6대 사상구의회는 2명의 의원이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였다.

각 구의회의 5분자유발언 중 여성정책 관련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문제를 각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발언의 주체도 의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 3.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이하에서는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 관련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드러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먼저 의정활동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의정활동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점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뒤의 원인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현재의 지방의회가 처한 구조적 현실이 가지는 문제점과 연결된다.

#### 가. 의정활동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 1) 성별 분리 통계의 현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 주류화를 분석하기 위한 의정활동 분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내용은 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성 주

류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회 구성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성과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2002년 3월의 비례대표제 도입부터이다. 여성의 참여 증대로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의 추천을 의무화하였다. 2005년 8월에는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되 여성후보에게 홀수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지방의원의 20.1%가 여성이 당선되며, 광역의원 중 14.8%, 기초의원 중 21.7%가 여성이 당선된다.

그럼에도 의정활동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홈페이지에 의원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흔히들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등을 거론한다. 일반시민이 지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의원에 대한 정보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홈페이지이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일차적으로 여성의원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는 물론이고 3개의 기초의회서 여성의원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장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원 사진을 통해 성별에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일반시민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홈페이지에서도 성별 분리 통계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아직도 성 주류화라는 개념은 착근조차 되지 못한 현실로 볼 수 있다.

## 2) 의원의 성별과 의정활동과의 관계

앞의 분석틀에서 이 연구의 의회의 성 주류화 환경을 위한 의정활동 관련 자료 분석은 두 가지로 방법으로 접근함을 밝혔다. 먼저, 성별로 나누어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정책 영역에 대한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성이 여성정책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가졌었다.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정책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여겨지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분석한 결과는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의원의 역할이 조금 두드러졌다. 그러나 남성의원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금품 조례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남성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남구·해운대구·사상구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서 여성정책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관심은 의원의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구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와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남성의원이, 여성발전기본 조례와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는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운대구의회의 경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남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상구의회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여성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분석한 3개의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의원도 여성정책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었다.



### 3)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성 주류화를 정책과 연결하는 도구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성별 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 등을 흔히 거론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2010년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작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때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 중 성인지 예산은 아직까지 지방의회에서 자주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성별영향평가제도, 성별 분리 통계 등은 2000년대 후반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성별 분리 통계(여성통계) 등의 단어는 자주 접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남구·해운대구·사상구의회 의정활동 분석 과정에서 이들 용어와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가장 크게 생각되는 원인은 아직까지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들이 지방의회까지는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의정활동 관련 정책 영역의 다양성 문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는 저출산 문제, 보육, 다문화 정책 등이었다.

저출산 문제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원인은 간단하다.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 의정활동에 반영된 것이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각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은 보육시설 지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 다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이었다.

이 시기에 부산광역시 차원과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성정책은 저출산, 보육, 다문화 정책 등과 대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은 다양한 영역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큰 틀에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의정활동보다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사회적 쟁점이 의정활동에 초점이 주어지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영역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지방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시사점

### 1) 중앙집권적 정책의 한계

흔히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0년을 맞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제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예산과 행정사무의 핵심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단순한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물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 부문에 있어 중앙권한의 일부 이양, 자치권의 부분적 확대, 주민참여의 제도화 등에 있어 일정 정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2대 28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사무 편중이 극심하다. 또한 인력 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역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집권적인 구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분석에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실정을 반영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는 여성정책의 사무도 거의 대부분 국가사무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의 여성정책 중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부산광역시는 수행한 것이 80%를 차지했다(주경미, 2006).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의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책무이행이나 권고이행을 하는 수준에서 그 역할이 제한된다. 결국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수행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만을 행사할 뿐 정책 자체에 대한 심의나 의결은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여성정책을 법률로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여성정책이 많지 않다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활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2)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의 구조

지방정부 형태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의 차이를 보면 기관통합형을 채택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가장 광범위하다. 다음으로 의회-집행위원회형을 채택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넓다. 기관분립형을 채택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가장 협소하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에 주민

의 대표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각기 독자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의 구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의 사례로 자주 거론하는 것이 집행부가 작성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 과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예산안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대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분립형의 형태이기보다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를 모습으로 이해된다. 여성정책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아닌 의회가 독자적으로 여성정책의 소재를 발견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 3) 지원 전문인력의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분립형의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립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의 주요기능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의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좌하며 조례안의 심의·의결·예산안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기타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정원과 임명에 관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기관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지향적 태도를 갖게 된다.

둘째, 지방의회 사무국의 조직형태는 법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구성, 산업구조, 경제력, 공간구조와 규모, 지역문제 등은 각양각색이기에 의정활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국의 전문성은 현재의 조직 내 보좌 인력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인력의 대부분(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제외)이 집행기관의 순환인사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므로 의회운영의 보좌에 전문성이 약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진, 전보권이 의장에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구성원을 스스로 조직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성 내지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원 전문인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최초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은 2003년 3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정책연구실 설치·운영규정」에 의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으로 독자기구로 되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주요업무는 정책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의회의 정책전문성 확보를 통한 시정발전 지원,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분석 활동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의정시책 개발 및 지원 등이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연구 및 업무 분야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항만·물류, 도시계획·주택정책,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 교육, 재정 등이다. 여성 분야의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실의 의정활동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27건, 현안과제연구 428건, 자료분석 268건, 조례정비 13건, 기타 13건 등 765건이다. 2009년도 의정활동 지원성과는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40건, 현안과제연구 311건, 자료분석 148건, 조례정비 26건 등 541건이다(부산광역시의회, 2011a).

# Ⅲ

##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와 의원의 역할

1. 면접조사 개요	75
2. 면접조사 결과분석	78

## 1. 면접조사 개요

### 가. 조사방법과 표본추출

이 장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부산지역 의원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면접조사는 半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기본적인 질문사항을 면접조사를 하기 전에 전달했고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목적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따라 1차로 추출했다.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적절한 다른 대상자를 추천받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2차로 추출했다.

### 나.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이번 연구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0명을 면접조사 했다. 면접대상자는 전직 및 현직 지방의회 의원 23명, 각 정당의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3명, 여성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4명 등이다. 성별은 여성이 21명으로 70%, 남성은 9명으로 30%이다. 지방의원의 특성으로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16명으로 69.6%, 비례대표 의원이 7명으로 30.4%이다. 재선 이상의 의원은 15명으로 65.2%이고 초선의원은 8명으로 34.8%이다.

면접장소는 의원사무실이나 의회 내 회의실 등이며,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다. 면접조사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 면접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했으며 면접내용을 인용할 경우 실명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허락을 구했으나 굳이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표 Ⅲ-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번	구분	이름	성별	소속	소속정당	선출	비고
1	시 의 원	김00	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
2		김00	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3		손00	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4		송00	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무소속	지역구	초선
5		신00	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6		이00	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
7		이00	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8		이00	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초선
9		전00	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10		김00	여	전 부산시의회 의원	민노당	비례대표	초선
11		송00	여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선
12	구 의 원	김00	여	해운대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초선
13		김00	남	연제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재선
14		나00	여	해운대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선
15		박00	여	금정구의회 의원	민주당	지역구	초선
16		서00	여	부산진구의회 의원	민주당	지역구	재선
17		손00	여	남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선
18		오00	여	동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선
19		임00	여	사하구의회의원	민노당	지역구	초선
20		정00	여	금정구의회 의원	민주당	지역구	재선
21		조00	남	사상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5선
22		한00	남	사하구의회 의원	민주당	지역구	재선
23		황보00	여	영도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지역구	3선
24	정당	이00	여	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25		장00	여	민노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26		정00	여	한나라당 부산시당 여성부장			
27	NGO 및 연구자	김00	여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28		박00	여	여성단체연합 부산대표			
29		박00	남	(사)지역경영연구소			
30		최00	여	부산대 여성연구소			

### 다. 면접의 주요내용

면접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수적으로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이다. 남성의원과 달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지, 여성이 보는 혹은 남성이 보는 의정활동에 대한 관점의 차이나 평가의 차이를 찾아보려고 했다.

둘째,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의정활동 경험을 알아보려고 했다. 문제는 미리 보내준 질문지를 읽은 면접대상자들이 성 주류화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질문을 변형해서 면접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성 주류화가 아니라 여성정책으로 질문을 대체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나갔다. 재선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의제가 보다 적절히 제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여성특위 공약이 있었지만 여성특위가 구성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앞으로 의회내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질문했다.

셋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10가지 개선방안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체크하도록 한 후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체크리스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의 제안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 :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개선
- 광역의회 상임위원회로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타 위원회 겸직 허용
- 성 주류화 혹은 성 인지 예산 특별위원회 구성
-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및 의회 운영에 있어 여성참여 확대
- 지방의회 의장 자문기구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지역사회 여성정책 자문단 구성 및 여성의원 의정활동 지원
- 부산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네트워크 결성

- 성 주류화를 연구하는 지방의원 연구모임 구성
- 의원을 위한 성 주류화 워크숍 개최
- 의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확대

## 2. 면접조사 결과분석

### 가. 여성의 주류화

#### 1) 의회내 소수자의 한계

과거에 비해 지방의회로 진출한 여성위원이 다소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성위원은 의회 내에서 수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접내용의 대부분은 여성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를 이야기했다. 남성에 비해 소수자라는 한계, 여성들끼리도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단합하지 못하는 한계, 여성의원 사이에도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차이로 인해 소수가 홀어지는 한계, 소수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부터 동료위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힘들다는 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개인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무슨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솔직히 혼자서는 큰 힘을 쓸 수가 없다. 성평등과 관련된 의제는 남성위원의 동의와 협력을 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사례번호 2)

여성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여성의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원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래도 여성이슈에 대해서는 최소한 명목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여성의원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잘 뭉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알아서 어려움을 헤쳐 가는 각개 약진 방식이다.(사례번호 4)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시각을 갖는 것처럼, 여성들이 여성의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들이 정치 제도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사례번호 8)

여성이라고 해서 같은 의원이라기보다는 여성의원 내부에서도 시각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나이가 드신 여성위원의 경우 과거에 비추어 여성의 지위와 역할

이 항상 되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의원들은 아직도 여성정책이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사례번호 13)

## 2)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약진

비록 지방의회 내에서 여성 의원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소수자이지만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은 동료의원, 특히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남성 동료의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는데 여성의원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평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여성 의원이 비례대표로 진입해 초선의원으로 활동한 후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재선의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잠재적인 경쟁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호평을 받기 쉽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같은 정당 출신의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다른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나 지역구 출신 여성 의원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NGO가 선정하는 올해의 우수 의원 등을 보면 의회 내에서 수적으로 소수자인 여성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만큼은 남성의 원보다 더 열심히 해내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정구에 정미영 부의장, 수영구에 김수옥 의장 등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성의원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남성보다 곱절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한 건의 의안도 연구 없이 심사에 임하는 여성 의원은 없습니다. 여성 의원은 질의도 꼭 한 마디씩 합니다.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발언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앞으로 여성 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지역의 성 주류화를 앞당기는 기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하다보면 여성이 잘 다룰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저출산 지원방안이나 보육·육아 문제 등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힘이 든다. 남성 의원들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세심하게 챙길 수 없는 정책안들이 있다. 공감대를 이끌어낼 때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원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사례번호 3)

저는 지역구를 가진 여성의원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것만큼 여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기존의 여성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다. 하나의 예로 구 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하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출연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해 예산에 반영토록 했으며 구정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할당제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예산투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계속해서 꼬집어야 한다거나 정책의 필요성을 잊지 않도록 누군가는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사례번호 13)

여성의원들이 많이 있어야 여성을 위한 정책, 성 주류화 정책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재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성 의원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료의원들도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한다.(사례번호 19)

실제로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비교적 잘 했어요. 이때까지 남성의원들에 비해 손색이 없고 오히려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이 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의회도 행정과 맞물려 가야하니까 행정국 내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나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제라든지 비율을 일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맞추어 가면서 여성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고 하면서 의회에서도 여성들이 진출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여성정책이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사례번호 28)

### 3)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진출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

의회 내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을 늘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전 현직 의원들은 성별을 떠나 한 목소리로 제도화를 통한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아래로부터 이러한 요구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정당 책임자들이 관계법령을 고치는 것, 그리고 정당의 당헌 당규를 고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남성의원은 전체(2,910명)의 1.6%(47명)만이 비례대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지만, 여성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은 55.5%(410명/739명)이다. 이처럼 여성의원은 의회진출에 있어서 비례대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의석(3,649석)의 12.5%(457석)에 불과하다. 이를 최소한 1/3 수준인 1,200석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후보자들이 지역구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후보자는 남성후보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으며, 선거 전략을 짜거나 선거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들도 후보를 공천하고 난 이후에도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같이, 여성후보가 지역구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남성보다 우선권을 주는 강제적 방식을 다른 정당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한 내용 중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는 진보정당 소속의 여성위원장의 자부심이 가득한 면접내용인데, 다소 길지만 옮겼다. 적어도 우리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해 이런 자부심을 가질 때 더욱 열정적인 여성의 정치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규에 모든 공직, 당직, 선출직 간부들이 성평등 의무교육을 1년에 1회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대의원까지 당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대의원의 경우 서약서를 쓰고 3개월 안에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직이 상실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의사 결정권이 없다. 또한 성평등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단 교육도 하고 있다.

평소에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다. 여성유권자포럼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의 여성정치인을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중앙당과 시도 당에도 여성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생산, 토론, 당론으로 수립, 각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30% 여성할당제는 당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각 위원회 구성에서도 30% 여성할당을 반영하고 있다.

같은 구에서 여성과 남성 후보자가 동시에 있으면 여성이 우선이다. 저희들은 지금 여성할당을 50%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2000년도에 창당을 했는데 초반에는 꼭 그런 걸 해야 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남녀평등이 정당의 정체성

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노동자, 농민,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여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토론했다.(사례번호 26)

#### 4) 지방의회 의장단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가 필요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없다. 상임위원장은 해당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관기관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의제 설정부터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이르는 권한을 가진다. 여성위원의 상임위원장 진출은 상징성 및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성위원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및 사례가 발견되었다. 구의회에서도 여성은 위원장이 아니라 ‘간사’라는 고정관념으로 여성의 상임위원장 진출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앞으로 광역시의회에서는 의장단을 구성하거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성위원이 무조건 1명 이상 들어가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구의회 의원으로 진입 한 후에 의장단 선거를 할 때 놀랐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 등을 모두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구의회 여성위원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직책을 하나 맡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직책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위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상임 의원은 모두 남성 초선위원이었고 여자 의원들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남성의원들의 생각 자체가 ‘여성도 간사다’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속한 구의회의 수준이고, 개인적으로는 여성위원으로써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의원들은 여성에게 이런 자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리에 대한 욕구가 여성보다 더 강합니다. 여성위원이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고위직 인사문제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연구해보면 자신의 능력, 실력 탓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재선위원으로서 5대와 6대의 다른 점은 제 개인적으로 5대 때는 분위기 파악을 못했으나 재선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의회 내부에서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3표로 인해 상임위원장을 빼앗겼으나 후반기에는 쟁취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과 맡지 않은 것에서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2차 전문가 회의결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출을 보면 여성을 무조건 1명이 되도록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이 무조건 1명이 들어가도록 강제하면 된다.(사례번호 7)

## 나. 성인지 관점의 주류화

여성의 주류화가 기존의 주류에 소수자인 여성이 진입해서 합류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합류한 여성 혹은 젠더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성인지 관점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앞서가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며,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 전반의 의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지방의회의 의식과 제도를 성 인지 관점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 1)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의 조력이 필요

구의회는 소속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을, 시의회는 전문위원의 성 주류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필요로 했다. 구의원은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의원을 돕는 전문인력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있다. 현재 구의회에는 3명(5~6급)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의회활동을 위한 자료준비 등을 돕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중후반의 연령대로 회기 일정 조정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지원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의원을 위해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한다. 인사이드가 잦은 편인데, 업무를 파악하고 의원들과 관계를 맺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서로 익숙해져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어느새 인사이드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다.

구의회의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의회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기존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된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



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을 선발할 권한이 의회에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이며, 의회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모색이 필요하다.

전문위원의 역할이 크다. 물론 언론, 공무원, 정책연구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 볼 때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된 예산이다, 정책이다, 조례다, 이럴 때 전문위원들이 “의원님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동향이 성 주류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해주어야 한다. 의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사례번호 28)

현재 여성의원으로서 본다면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 의원 본인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구의회의 전문위원에게 도움요청을 하면 집행부의원로부터 누가 자료를 주었느냐는 질책을 받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시의회처럼 구의회도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구요.(1차 전문가회의결과)

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청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를 조율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집행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사례번호 16)

현재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정책이 올라왔을 때 어떤 전문위원이나 공무원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구의 현황 아라든지, 구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 등등 의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행정 입장에서 의원을 설득하려고 한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은 외부다.(사례번호 19)

다수의 구의원은 전문위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우리 구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세 사람 있다. 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정책이나 내용적인 지원보다는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인사권이 의회에 있든지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든지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의원과 전문위원이 결속이 돼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작년 행정감사 질문할 때 궁금한 사항을 전문위원한테 검토해 달라고 냈더니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밤 11시 반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이렇고 저렇고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행정적인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실제로 가능하든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조례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사례번호 20)

전문위원이나 상임위원회 담당 직원이니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성 평등한

의정활동엔 제약이 따를 것 같다. 인사이동시 여직원 배치도 고민되어야 할 것 같다.(사례번호 22)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은 전문위원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 분들은 행정적인 정보라든지 돌아가는 노하우를 7급 공무원보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방향은 주민에게 묻는다.(사례번호 23)

## 2) 지방의회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여성의제 상시 논의 구조 마련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없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경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전문가 회의와 면접조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광역의회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기초의회에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의회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시적으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일차적인 의제화가 가능하다는 것, 단독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렵다면 타 위원회와 겸직으로도 운영가능 하도록 조정하더라도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러한 명칭의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지,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성 주류화 의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어렵고 기존 의정활동에 변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할 수 없다면 특별위원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성 주류화 위원회’는 명칭이 어려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성평등위원회’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므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성평등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면접결과,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권이 없는 위원회 설치보다는 강력한 활동기구로써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등감시소’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회활동에서 상임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소속 위원들의 위원회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또한 시정이나 구정이 위원회의 활동에 조응하여 관심을 갖고 활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장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사례번호 28)

무엇보다 성 주류화가 확산되고 정책에 반영되려면 기초의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의회마다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이나 예산 등의 여러 부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관통되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평등, 성 주류화에 대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정책들이 시민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의회내부에서는 아예 성 인지, 성 주류화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인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라면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의회 내부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등 특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건설, 토목 관련 의원이 여성특위를 만들 경우 상식적인 의견만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해대책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소위원회로 꾸렸습니다. 국회도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 3) 지방의회 성 주류화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사회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지방의회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성평등한 의정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선이 필요하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장단, 혹은 해당 여성정책관련 위원회를 위해 ‘성 주류화 자문위위회’를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의식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비해 강제성은 약하지만 큰 부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연스러운 양성평등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여성정책 자문단

구성이나 연구회 구성 등은 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사례번호 1)

지역사회 여성정책 자문단 구성 및 여성의원 의정활동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사례번호 13)

지방의회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다. 위원회 별로 자문기구가 있는데 여성정책자문회를 별도로 설립해서 이 자문단에서 시로 의원들에게 정책제안을 만들어주면 여성정책에 대해 상당히 좋은 제안 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그 내용들이 여성정책자문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성의원들이 먼저 받아 갔을 때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사례번호 2)

지방의회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정책자문단이 당별로 구성이 되든지 여성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든지 해서 실제 필요한 목소리를 그곳에서 점검하고 그에 기반해서 발굴해서 의원님들한테 재공 해주는 게 필요하다. 위원회 별로 자문기구가 있는데 여성정책자문회를 별도로 설립해서 이 자문단에서 시로 의원들에게 정책제안을 만들어주면 여성정책에 대해 상당히 좋은 안 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그 내용들이 여성정책자문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성의원들이 먼저 받아 갔을 때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사례번호 15)

#### 4) 지방의회 의원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구성이 필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 주류화 연구를 위한 모임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회에는 의원들이 구성한 자발적 연구모임이 3곳 정도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부산광역시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연구모임이 만들어진 곳이 없다.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이러한 모임이 개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직까지 부산에서 성평등, 성 인지 예산, 성 주류화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 모임이 결성된 사례는 없다. 앞으로 남녀 지방의원들이 관련 주제로 연구모임을 결성한다면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임 구성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의원들끼리 계속 연구모임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동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해서 조례를 혼자서 다 검토하기는 힘든데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공동발의로 하면 더 쉽게 제정할 수 있는데 현실상 잘 안되고 있다. 의원들의 자생적인 연구모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협조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근 생활정치, 의정연구 관련해서 생각있는 몇 사람끼리 먼저 해 보자는 이야기들이 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연구모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사례번호 19)

구의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것 외에 워크숍이나 의정활동 연구모임은 현재 없다. 당에서도 지원하는 건 없다.(사례번호 21)

상시적으로 몇몇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걸 점검해 나간다가거나 개발해 나간다는 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으니까 한나라당에 의원수가 많아 책임감은 느끼는데 어찌 보면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여성의원들이 연구모임처럼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각 영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시든지 포럼을 하시든지 해서 분기별로 그런 걸 좀 계속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당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성주제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원수가 많아 책임감을 느끼는데 당에서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직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 시의원의 경우 연구모임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차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세대 육성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사례번호 26)

성평등 확대를 지원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라’, ‘이런 사업을 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꼭 여성특위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프트하게 연구모임,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여러 안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성평등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사례번호 11)

여성들만의 연구모임은 없고 의원들 전체는 많이 하고 있다. 정책으로 반영도 시킨다. 필요로 인해 만든 연구모임도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세군데 정도는 하고 있다. 조찬연구모임이 있는데 발표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제안하고 반영한다. 의원들끼리 모인다. 낙동강 발전, 부산시 건축에 관한 것이라든지 부산시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조찬모임하고,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발표한다. 연구비로 교수님이나 전문위원을 한 분씩 초빙한다. 교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의한다. 5기 때보다는 6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모임을 하고 있다.(사례번호 5)

## 5)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성 주류화 워크숍이 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이나 성 인지 정책과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성평등교육은 부족하다. 부산의 경우 시의회는 물론이고 구의회에서도 의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이 실시된 예는 없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2회 정도의 성평등 교육 및 성 인지 예산 도입과 관련된 교육 등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했다. 남성 지방의원들은 성 주류화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 성 주류화라는 단어도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생소한데 어떻게 이런 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남녀의원 모두 성 주류화는 생소하므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면접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교육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명칭에 있어서는 ‘교육’보다는 ‘워크숍’이 더 적절할 것이며 진행방식도 워크숍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성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교육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앞으로 남녀가 동반자로서 어떻게 의회를 성 주류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혹은 워크숍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평등한 의회운영에 대한 의식교육부터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식자체를 바꾸기 위해 순화를 시켜야 한다. 의원들이 그동안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뒷풀이 문화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었던 것 같다.(사례번호 25)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남성을 가해자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성 주류화 교육을 시키려면 요청하는 경로가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의원들에게 먼저 알려주어 내부에서 여성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지방자치 시대인데 누군가 밖에서 의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의원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 합니다.....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광역보다 기초의 역할 강화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1차 전문가 회의결과)

## 6) 시민단체의 역할강화 :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과 집행부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런 중간자적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조력하고, 비판하고, 연대하는 일을 NGO에서 담당하고 있다. 면접조사 대상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와

NGO간의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NGO이므로 성 주류화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의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적은 있지만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장애인인권포럼’에서 하는 모니터링처럼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수행하는 의정활동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국회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한 의정활동에 대해 시상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성 주류화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모니터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모니터링의 방향과 내용,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NGO에서 선거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의회의 역할강화에서 볼 때 의회의 역할 자체가 시장에 대한 경쟁과 감시이므로 성 주류화로 의회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실질적으로 강화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보고 성 주류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역행하는지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정책우수상을 제정해서 준 것처럼 하면 됩니다.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상을 줄만큼 했는지,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 성 주류화고 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샘플들을 주어서 의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대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장애인인권포럼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을 받고 나면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 주류화도 그렇게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원들도 처음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평가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회의록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평가할 때에 성 주류화와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성 주류화 모니터링에 대해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사례 번호 10)

부산장애인인권포럼(김호상 대표) 등의 활동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성주류화를 위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제로 모

### Ⅲ. 부산지역 의회의 성 주류화와 의원의 역할 ●●● 91

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가령 장애인관련활동 검색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성 주류화는 관련 검색어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언론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사례번호 20)



# IV

## 성 주류화를 위한 지방 의회의 역할강화 방안

1. 의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에서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95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95
3.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여성 진출 확대	96
4. 지방의회에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96
5.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자문위원회 구성	96
6. 지방의원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결성 지원	97
7.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워크숍 개최 정례화	97
8. 기초의회 전문위원직 개방형직위로 전환	97
9.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 도입	98
10.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은 성 주류화 정책으로	98

성 주류화를 위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출한 정책제안은 여성의 주류화, 성 인지 관점의 주류화와 관련된 것이 대다수이며, 주류의 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에서 발견된 의미있는 정책제안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의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에서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연구자를 위시해서 시민들은 지방의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의회 홈페이지일 것이다. 의회 구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 참여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기초자료, 즉 현재 의회에서 여성위원의 숫자와 비율, 역대 의회 구성에서의 여성위원의 숫자와 비율 등의 자료부터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여성의 주류화이다. 현재까지 지방의회로 진출한 여성의원들은 여전히 소수자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의 의회진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관련 법률이 개별 정당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여성을 할당했기 때문에 지역구는 여성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 역시 포착되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의회에서 여성 주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의회진출을 지원하는 비례대표 할당제 확대,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3.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여성 진출 확대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한다. 현재까지 여성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한 예는 전무하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여성이 선출된다는 것은 상징성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의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크므로 의회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라도 성 주류화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민감한 여성의원의 의장단 진출과 상임위원장 진출은 필요한 사항이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여성 1명 이상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여성의원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지방의회에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특별위원회 구성

광역의회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기초의회에서는 성평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 주류화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된다.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지만 구성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존의 상임위원회에 성평등위원회를 추가해서 만들고 성평등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은 타 위원회와 중복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광역의회에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성평등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반면 성 주류화는 어렵고 생소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자문위원회 구성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를 위해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자문위원회는 특성상 자문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나 의장단과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성 주류화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6. 지방의원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결성 지원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아직 성 주류화와 관련된 연구모임 결성된 적은 없다. 2013 회계연도부터 ‘지방 성 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되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성 주류화와 관련된 연구모임을 발족하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이 있지만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무하므로 기초의회의 성 주류화 연구모임 결성 및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7. 지방의회에 성 주류화 워크숍 개최 정례화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 주류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의식교육과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처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의 경우 교육보다는 워크숍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보다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있으므로 성 주류화 관련 교육 혹은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기초의회 전문위원직 개방형직위로 전환

기초의회 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직은 임명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력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의회의 성 주류화를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의회 전문위원직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성 주류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력에게 채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9. 성 주류화 의정활동 모니터링 도입

장애인인권포럼의 국회 및 광역의회 모니터링과 같이 성 주류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의원들에게 감사상을 전달하고 성 주류화 의정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10.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많은 성 주류화 정책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며 지역은 중앙의 식민지라는 과격한 표현이 지역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격려받는 실정이다. 여성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류화와 병행해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주류화는 지역의 주류화이다. 연구과정에서 만난 지방의원 중에 성 주류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의회내 성 주류화를 위해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앙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을 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여성 관련 정책 중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지방정부는 시행만 한 정책

#### Ⅳ. 성 주류화를 위한 지방 의회의 역할강화 방안 ●●● 99

이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반영하는 성 주류화를 기대한다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원홍 외, 2005,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기숙, 1998, “선거와 정당·압력단체와 여성,” 장공자 외(저), 『새로운 정치학』, 인간사랑.

주경미, 2006, 『여성정책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Randall, Vicky, 1982, Women and Politics.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Sapiro, Virginia, 1983,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Wome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 [council.bsnangu.go.kr](http://council.bsnangu.go.kr)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2007, 의회보 제16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2008, 의회보 제17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2009, 의회보 제18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2010, 의회보 제19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www.bsnamgu.go.kr](http://www.bsnamgu.go.kr)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홈페이지 [www.sasang.go.kr](http://www.sasang.go.kr)

부산광역시 사상사구의회 회의록 [www.sasang.go.kr](http://www.sasang.g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록 [council.haeundae.go.kr](http://council.haeundae.g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011, 제5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백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www.haeundae.go.kr](http://www.haeundae.go.kr)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http://book.council.busan.go.kr/>

부산광역시의회, 200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200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2008a,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2008b, 의정백서(제5대 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200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20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2011a, 의정백서(제5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2011b, 2011 의회운영사례집.





## 부 록

〈부록 1〉 1차 전문가 회의결과	105
〈부록 2〉 2차 전문가 회의결과	110
〈부록 3〉 3차 전문가 회의결과	115

**<부록 1> 1차 전문가 회의결과**

일 시	2011년 6월 1일 15시 부터 ~ 18시 까지					
주 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방안					
목 적	연구전반에 관한 자문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소개 및 연구과제 설명</li> <li>◦ 전문가 의견 수렴</li> </ul>					
참가자	강봉구	김원태	오다겸	유순희	이한옥	연구진
	부산광역시 여성정책 담당자	부산광역시 의회 수석 전문위원	부산시 사하구의회 의원	부산여성 뉴스 대표	부산광역시 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주경미 박금식 강성훈 조명희
내 용	<p>주경미 : 참석자 소개와 함께 연구개요 설명</p> <p>강봉구 : 제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예산과 여성정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성평등 관점에서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 준비한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의회 쪽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은 2006년 5대 의원부터 총 8명이다. 강성태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계기가 되어 출산장려기금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1,000억원을 2020년까지 조성목표로 2011년에 100억원을 조성했음). 주로 보사환경위원회의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강성태 의원은 보사위가 아님에도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5대에 비해 6대가, 4대에 비해 5대가 더 늘었습니다. 5분질의가 늘었고, 질의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가 늘었고 분석하는 기법도 정교해졌습니다. 예결위의 심사도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p> <p>주경미 : 여성분야 정책예산들은 최종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감액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습니까?</p> <p>김원태 :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조정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십니다.</p> <p>박금식 : 2007~2010년 자료를 보니까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2,000 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p> <p>강봉구 : 이런 사업에 자체 재원을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시가 주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p> <p>주경미 : 현재는 의원이지만 이전에 NGO활동가로써 의정활동 참관하게 된 경위와 의정활동 참관 경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p>					

	<p>오다검 : 모니터 요원들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여성들이 모니터요원이고 남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모니터요원을 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예산이나 정책을 본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와 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감사하는 차원이었고 의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조례안 발의를 어떤 의원이 얼마나 하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수의원에게 대해 상임위원별로 1인 이상 연말에 시상도 했습니다.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현재 여성의원으로서 본다면 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 의원 본인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구의회의 전문위원에게 도움요청을 하면 집행부의원로부터 누가 자료를 주었느냐는 질책을 받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시의회처럼 구의회도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구요. 이런 교육이 필요 합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구의회의 경우 미미합니다. 여성이 의회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주경미 : 구의회 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가감 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p> <p>오다검 : 기초의회의 여성들은 대체로 연세가 많습니다.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만 여성에 관한 조례나 예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여성 전문위원이 의회에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 여성의원끼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정당별로는 모임을 합니다.</p> <p>유순희 : 여성들의 모임이 여야로 나뉘어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역별로 여성위원의 정례화 된 모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의원을 지내던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당별로 하고 있습니다.</p> <p>김원태 : NGO나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여성의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유순희 : 당선 후에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지 여성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식이 희박합니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잘 몰라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의원으로 당선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원으로써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기회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성 주류화가 확산되고 정책에 반영되려면 기초의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의회마다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이나 예산 등의 여러 부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관통되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 성 주류화에 대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정책들이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의회내부에서는 아예 성 인지, 성 주류화라는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라면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p> <p>김원태 : 용어자체가 지난날의 '여성지위향상, 남녀평등, 양성평등'과 같은 것은 여성상위를 목표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mainstreaming이라는 것은 주류와</p>
--	---

비주류의 개념이므로 뭔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 주류화라는 용어로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원에게도 다가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용어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여성의 권한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위직 여성공무원은 70%를 육박합니다. 이미 성 주류화는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에 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당시의 목표는 여성가족개발원을 만드는 것이었고,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늘이는 것,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뭔가 방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열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외적인 큰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건설, 토목 관련 의원이 여성특위를 만들 경우 상식적인 의견만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해대책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소위원회로 꾸렸습니다. 국회도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모임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여기서 양성평등에 관련된 세미나를 해보자고 문제제기를 하고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연구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해 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를 안 주면 의원들은 이런 모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관련 연구기관에선 끊임없이 연구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상하반기에 상임위위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합니다. 5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제중모의원계서 여성특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원들이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를 많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갔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욕구의 부족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과 목표가 정해진 후에 공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로 나설 때는 부담 없이 공약을 내걸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도 되니 일단은 의장단 선거 공약에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녀평등 의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장치를 장애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예산부분만 건드려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한옥 : 여성의 평등실현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성 주류화로 전환되면서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원들께서 성 주류화를 하면 부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무엇이 좋아지는가? 부산시는 뭐가 좋은가? 그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성 주류화를 했을 때 부산발전, 부산여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왜 성 주류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달이 미흡합니다. 만일 의원들이 성 주류화의 시각을 가지고 여타의 정책을 본다면 의정활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식이 공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연구가 진

	<p>행되어야 합니다.</p> <p>유순희 :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의원별로 발언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참여나, 권익, 복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주경미 : 오늘 구의회의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성 NGO가 의회 밖에서 여성의원들을 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성 주류화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오다검 : 구의회 의원으로 진입 한 후에 의장단 선거를 할 때 놀랐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모두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구의회 여성위원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직책을 하나 맡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직책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직책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위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모두 남성 초선의원이었고 여자 의원들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남성위원들의 생각 자체가 '여성은 아직도 간사다'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속한 구의회의 수준이고,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원으로써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의원들은 여성에게 이런 자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 게다가 자리에 대한 욕구가 여성보다 더 강합니다. 여성위원이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p> <p>김원태 : 부산시의회도 여성위원이 상임위원장 맡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울산시, 인천시, 경남도의 경우 여성이 광역의회 의장도 합니다. 이것이 여성위원의 영향력 확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주류화라고 생각합니다.</p> <p>오다검 : 정치의 세계에서 기초의회를 본다면 인식의 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성이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 여성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보, 네트워크가 많이 미흡합니다. 기초의회도 정의 색깔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p> <p>강봉구 : 부산시에서는 공무원들 누구나 성 인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성 인지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교육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p> <p>오다검 : 성 인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의원들에게까지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p> <p>김원태 :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남성을 가해자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성 주류화 교육을 시키려면 요청하는 경로가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의원들에게 먼저 알려주어 내부에서 여성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이한옥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내어서 그 보고서가 현실화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려면 이번 연구는 의원들의 실천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p>
--	---

는 매칭 포인트가 많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작업은 매칭 포인트를 탁탁 집어서 줄 때입니다. 또한 연구자와 지방의회 의원, 부산시 본청의 정책담당자들 모두가 이번 연구를 계기로 윈-윈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원태 : 기초의회를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일단 제안하는 것은 의원의 숫자가 많은 큰 구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인데 누군가 밖에서 의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의원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 합니다. 가령 구의원이 강의요청이 있어서 의회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작은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 판단으로 “우리 구에서는 할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시의회에 비하면 기초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많은 것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정당이 압도적인 다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관련된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자치단체는 감집행부 약의회 구조가 강합니다. 시의회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구의회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려면 광역보다 기초의 역할 강화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유순희 : 구의회를 선별할 때 여성정책의 부문의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구 라든지 과거에 선정된 적이 있는 구라든지 이런 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수자치구의 경우 집행부에서 선도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의회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었을 것입니다.

김원태 : 금정구에 정미영 부의장, 수영구에 김수옥 의장 등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여성의원들 의정활동하시는 것 보면 남성보다 곱절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한 건의 의안도 연구 없이 심사에 임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여성 의원은 질의도 꼭 한 마디씩 합니다.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발언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주경미 : 이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를 정리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 <부록 2> 2차 전문가 회의결과

일 시	2011년 6월 8일 15시 부터 ~ 18시 까지					
주 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방안					
목 적	연구전반에 관한 자문					
순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자 소개 및 연구과제 설명</li> <li>전문가 의견 수렴</li> </ul>					
참가자	신숙희	김영희	손애취	황아란	황영주	연구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5대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 부 교수	부산외국어 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주경미 박금식 강성훈 조명희
내용	<p>주경미 : 연구개요, 1차 전문가 회의결과 설명</p> <p>황아란 :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주류화의 이슈를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끌고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지방의원의 생태와 행태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인식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의정활동에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활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므로 여성이슈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의원들의 역할인식은 어떠하며 누구를 대표하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성의원도 함께 인터뷰를 하여 비교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여성의 문제이냐? 기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 숫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터뷰를 통해, 누가 감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네트워크도 좋지만 상설기구가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동등감시소가 그러한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았던 걸로 봅니다. 여성정책 이슈에 대한 평가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표화 될 수 있다면 언론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성별차이,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의 차이를 대응성 측면에서 설문조사 했더니 여성유권자는 여성, 남성유권자는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남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이슈라고 보는 저출산, 다문화, 보육은 남·녀 적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육, 노동 분야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슈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p> <p>주경미 :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표성 대응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p>					

황영주 : 연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지방의회에 있어서 젠더 주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 주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주체라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gender mainstreaming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이를테면 남녀평등이라고 이야기 할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남녀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성 주류화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부분이 다른 차원의 정책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충분히 교육되어야 하고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 주류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고민 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가 gender mainstreaming에 주제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남녀평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이후에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라든지 정책제안들을 총괄해서 시나 구의회에 제안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예를들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조례들 지금까지 연구될 영역을 총괄해서 조례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넣는다든지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주류화와 관련된 의미에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손애휘 :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주류화라는 의미 자체도 와 닿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의 정치 포커스 자체가 취약계층의 여성, 저소득층의 여성지원이 주이다. 예산자체에서 시, 구와 차이가 있으나 비중으로 보면 여성관련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항목인데 주로 지원입니다. 너무 정책포커스를 여성을 약자로 보고 지원이나 보호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분야별 진입장벽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입 이후가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의사결정권한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리더십, 설득력, 네트워크 부분에서 많이 약한데 여성들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5대는 평의원 이었고 지금은 총무위원장인데 의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보 수집력, 판단력,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차이를 확실히 느낍니다. 차이는 많습니다. 의원수가 많지 않으므로 의원 수만 확보되면 상임위원장 가능합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여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들의 의사결정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의회의 경우 여성지도자리더십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추미애 의원의 강의 1회, 댄스 정도입니다. 물론 보호도 필요하지만 능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나와 줘야 합니다. 노골적인 이야기는 그렇긴 하나 시의회와 구의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정은 집행차원이므로 구정에는 정책변화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의회에서는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사업하기가 편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규모가 작은데서 오는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의 수도 작고, 대화하기도 좋아서 편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범위가 넓고 의원수도 많아 집행부설득보다 동료의원설득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숙희 : 시의회 의원 53명중 여성의원인 5명인데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경합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여성자체가 자기가 성장을 해서



집행부와 민원과 접근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53명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고, 교육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보육과 교육 부분은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정책연구실이나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여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성정책연구를 해야 합니다. 정책연구실에 정책연구원이 10명이 의원 53명 전체를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연구진의 파트를 늘려야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예산을 부담해서 개발원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여성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매칭 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의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분들이 뭉쳐서 의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시의회도 개인연구원이 있으면 활발하게 정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임뿐 아니라 전체를 봐야하는데다 분야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특위 구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다뤄야 할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다뤄야 하므로 보육, 저출산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강성태의원은 저출산, 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남성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 많이 아쉽습니다. 역할수행 대체기관은 없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분야라고하면 다문화, 여성, 보육,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들 수 있는데 여성정책분야라서 여성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남성 구분해서 정책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여성의 상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원 배출이 시급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고위직에 있어도 인사문제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를 연구해보면 자신의 능력, 실력 탓이라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 5대와 6대의 다른 점은 제 개인적으로 5대 때는 분위기 파악을 못했으나 재선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의회 내부에서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3표로 인해 상임위원장을 빼앗겼으나 후반기에는 쟁취할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과 맡지 않은 것에서는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급선무가 여성특위가 아니므로 여성특위 만들기가 좀 그럴긴 하나 공약을 했으면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 여성특위가 올해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하겠든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힘을 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문제도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가 특위를 꾸릴 수도 있지 않는가? 특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의원뿐 아니라 남성의원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봅니다.

황영주 : 2005년도 이후부터 유럽에서 여성 관련 특위나 여성 관련 부처를 어떻게 변경 했는가 하면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소수자나 약자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같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전술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주경미 : 유럽의 경우 여성이슈가 퇴보를 하고 다문화나 소외자들이 부각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황영주 : 여성이슈를 여성으로만 다루기에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는 해결이 안 되므로 다른 약자와 관련되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약화되었으나 더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소수자와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빈곤의 여성학을 신자유주의 경제문제와 함께 보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희 : 영남이나 부산의 차원은 아니고 5대는 47명중 6명 이었는데 6대 때 성 주류화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에 있어서 지역구 한나라당의 여성들의 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보면 역행한다고 보입니다. 각 구의회든 시의회든 여성특위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법으로 정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한나라당에서 여성들이 차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공약보다 공천이 중요합니다.

신숙희 : 공천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을 공천해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할 때 제도적으로 정한대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성인재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공천에 관련해서 인색한 부분이 있으나 민주당의 경우 여성인재를 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의 투쟁이 제일입니다. 여성인재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재는 많이 있는데 나오고 싶은 사람들 생각도 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김영희 : 최소한 1명씩이라도 늘어나가야 하는데, 물론 양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강화에서 볼 때 의회의 역할자체가 시장에 대한 경쟁과 감시이므로 성 주류화로 의회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실질적으로 강화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보고 성 주류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역행하는지가 체크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정책우수상을 제정해서 준 것처럼 하면 됩니다. 성 주류화와 관련해서 상을 줄만큼 했는지,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 성 주류화고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샘플들을 주어서 의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대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장애인인권포럼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 관련 고민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 주류화도 그렇게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원들도 처음에는 장애인단체에서 평가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회의록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평가할 때에 성 주류화와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황영주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NGO나 여성관련 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손애취 : 구의회는 능력 있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합니다. 구의원 공천시 여성인재가 없습니다. 부산 남구의 경우에는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여서 여성의원후보를 찾아봤으나 못찾았습니다.

황영주 : 중앙당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많이 엽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젊은 당원을 길

러내고 젊은 당원을 미래의 능력을 보고 공천해 줄 수 있는 과감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중앙당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키워나가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경미 : 자문회의를 했고 면접을 두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남성의원 중에 꼭 만나봐야 할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마치다.

**<부록 3> 3차 전문가 회의결과**

일 시	2011년 8월 23일 15시 부터 ~ 18시 까지					
주 제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방안					
목 적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순 서	◦ 참석자 소개 및 연구과제 설명 ◦ 전문가 의견 수렴					
참가자	박해숙	송순임	손애희	유순희	이한옥	최현실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연구원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부산여성 뉴스 대표	부산광역시 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황아란	고은정	여명희	연구진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참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참관)	주경미 박금식 강성훈 조명희		
내용	주경미 :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결과 설명.					
	강성훈 : 심층면접자 30명의 인터뷰 내용을 문항별로 요약해서 보고.					
	유순희 : 30대부터 젊은 차세대층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주류화 연구모임, 여성의 대표성을 갖는 여성정책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행정조직 안에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의원의 확대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럼에서도 이런 것이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순임 : 시의회여성특위가 왜 구성이 안 되었는지 원인을 설명드리면 핵심은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숙 :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입하는 것 자체는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에 성공한 것인지 실제로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여성단체에서 많이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 들어간 여성위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존립이 여성의 권익과 여성단체가 여성의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요구를 담아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NGO와 지속적으로 아젠다의 관통을 위한 특위나 상임위는 필요합니다. 자문위원회도 반드시					

	<p>필요합니다. 성 주류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통계에 대한 요구나 요청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p> <p>손애휘 : 이 시점에서 이 과제를 해낸 의도가 무엇일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주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0가지 중에 현실적인 건 없다고 봅니다. 말은 맞지만 과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회가 성주류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문제와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성 주류화 정책이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등이 나와줘야 합니다. 강집행부-약 의회의 구도에서 과연 정책화가 가능한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구도에서는 여성의회가 아무리 많이 의회로 들어와도 의원은 대안제시 밖에는 못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의회는 예산편성 항목이나 증액은 못합니다. 아예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현 구도에서 시의회나 구의회는 예산을 깎는 것 밖에는 못합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의회의 정책결정권 강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p> <p>송순임 : 시의회의 경우 제도적으로 여성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조항으로 넣을 수 있도록 압력과 건의가 있으면 좋은 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집행부-약의회는 대통령과 국회,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 등 밑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연간 예산을 8조에서 10조를 다룹니다. 시의회의 경우 여성 시의원 5명이 이런 예산을 모두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부로부터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합니다.</p> <p>이한옥 : 남성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여성친화적이고 가정친화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성 주류화는 일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드러난다면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 내에서 성 주류화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면, 이곳에 적절하고 방향성이 맞는 유연한 주제를 던져주면 됩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독립성 부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나가는 주제로 개발원과 NGO가 함께 한다면 지역에서 견인하는 역할도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p> <p>최현실 : 지역 인구구조의 특징상 늙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에 반영해야하고, 남성의원의 역할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성의회가 어떻게 끼워들기 할 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p> <p>황아란 : 보고서- 2장 3장의 환경분석과 의원의 역할인 2장에 문제점 도출이 있어야 합니다. 현황이나 관계망에서 문제점이 나와야 합니다. 3장 여성의 역할에서의 한계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결론 방안을,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느 때 심층면접을 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의원들이 역할을 잘 못 한 것인가,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있어야 합니다. 성 주류화의 동력은 지방의원이 해야 할 역할 외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안을 나열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 아젠다 세력화 기본적으로는 환경조성, 조례,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지방의원의 전략,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NGO의 역할은 사회운동입니다. 이슈화하고 파급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p>
--	--

생크탱크가 되주어야 합니다. 파급시킬 수 있는 역할, 자료제공,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제공해 줘야하는 역할, 여성가족개발원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실이나 부서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시적인 연구 인력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낙선한 여성후보, 신인정치인 발굴-정치교육, 선거운동의 전략 같은 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입니다. 누군가 주체가 되어 풀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성단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멘토로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인재풀인 여대생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의원 보좌관이나 보좌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은 NGO에서 할 역할이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개발원의 역할을 확대시켜가야 합니다.

송순임 : 9월부터 보좌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인 1보좌관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선례가 있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관찰시킨 것이고 여성보좌관도 몇 명 있습니다. 시의회 정책연구실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다른 시도에서 따라 했습니다. 한 발 앞서나가야 합니다. 인턴제로 보좌관을 위촉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제의 명령, 시정명령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경미 :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를 마칩니다.

## Abstract

### Role Intensification of a Local Council for Gender Mainstreaming: with focus on the Busan District

Kyung-Mee Joo  
Keum-Sik Park  
Seong-Hun Kang  
Myung-Hee J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lan to intensify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for gender mainstreaming of a distric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d a case study with focus on 3 District Councils and Busan Metropolitan Council in Busan. This study set its research period from April until August, 2011 and used mostly the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survey as a researching method. As regards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related the city council activities, and conducted the interview survey targeting the 30 people including former & present members of the city council, political parties interested, and experts, etc. This study drew 10 suggested policie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follows:

1. Implementation of Gender Separation Statistics in Homepage of the local council and every sort of data
2. Intensification of legal measures for expanding women members' entry into the local council
3. Expansion of Women members' entry into the chairmanship & vice-chairmanship and head of the standing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4. Organization of gender equality committee & gender equality ad hoc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5. Organ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advisory committee in the local council
6. Support of the local council member's organization of the gender mainstreaming research group
7. Opening the local council-sponsored gender mainstreaming workshop on a regular basis
8. Switching of the position of the local council expert adviser to open position
9. Introduction of monitoring of gender mainstreaming local council activities
10. Putting the local council in charge of the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2011 연구보고서 14-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의 지역 연구보고서

## 지역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 부산지역 중심으로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432-2 94330

978-89-8491-430-8 94330 (세트)

<정가 9,500원>